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7~200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7~2008

인 쇄 2008년 2월 22일

발 행 2008년 2월 22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7~2008 / 통일연구원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 (연례정보보고서 ; 2007)

ISBN 978-89-8479-451-1 93340 : ₩6000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8000642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7~2008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 |
|-----------------------------|----|
| I. 동북아정세 | 1 |
| 1. 동북아 안보정세 | 3 |
| 가.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 강화 | 4 |
| 나. 미·일동맹과 아·태 민주연대 결성 | 7 |
| 다. 중·러의 군사협력과 세력권 확대 | 10 |
| 라. 미·일·중·러의 실리외교와 갈등 | 13 |
| 마. 2008년 안보정세 전망 | 18 |
| 2. 북핵문제 | 23 |
|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 27 |
| 가. 한·미 관계 | 27 |
| 나. 한·중 관계 | 34 |
| 다. 한·일 관계 | 38 |
| 라. 한·러 관계 | 41 |
| | |
| II. 북한정세 | 45 |
| 1. 대내정세 | 47 |
| 가. 정치 | 47 |
| 나. 경제 | 51 |
| 다. 사회 | 57 |
| 라. 군사동향 | 62 |
| 2. 주요 대외관계 | 65 |
| 가. 북·미 관계 | 65 |
| 나. 북·중 관계 | 68 |
| 다. 북·일 관계 | 73 |
| 라. 북·러 관계 | 76 |
| 3. 대남동향 | 80 |

| | |
|-------------------------|-----|
| Ⅲ. 남북한관계 | 85 |
| 1. 남북대화 | 87 |
| 가. 남북정상회담 | 87 |
| 나. 남북 총리 및 장관급회담 | 95 |
| 다. 경제분야회담 | 101 |
| 라. 군사분야회담 | 106 |
| 2. 남북교류협력 | 112 |
| 가. 경제분야 | 112 |
| 나. 사회·문화분야 | 118 |
| 3. 인도주의 사안 | 123 |
| 가. 대북지원 | 123 |
| 나. 이산가족문제 | 126 |
|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 130 |
| 라. 북한인권 | 133 |
| 부록: 2007년 주요 사건일지 | 139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3 |

표 목차

| | |
|---|-----|
| <표 Ⅲ-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92 |
| <표 Ⅲ-2> 거래 유형별 남북경협 추이 | 113 |
| <표 Ⅲ-3> 2007년 1~10월 중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 114 |
| <표 Ⅲ-4> 분야별 대북지원 개요 | 124 |



동북아정세

1.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4개국은 장기간에 걸친 국력추세 변화를 염두에 둔 미래 전략 구도 하에서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경계하며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 편승하여 국방력을 증강하며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미·일 동맹 강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최첨단무기 개발 등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하며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미·일과 중·러는 각기 양자 차원의 안보협력을 긴밀히 하는 한편, 외부세력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미·일은 호주를 포섭하여 삼자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인도를 포함한 아·태지역 민주연대를 결성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중·러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는 미·일 중심의 아·태 민주연대와 중·러 중심의 상하이협력기구라는 두 개의 큰 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대립구도는 이념과 체제 경쟁을 지향하는 경직된 대결구도가 아니다.

미국은 중·러를 전략적으로 견제하면서도 이들의 협조 없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테러와의 전쟁 등 세계적인 문제와 북한 핵개발, 대만 독립 문제 등 동북아 지역 차원의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은 회피하고 있다. 중·러 양국도 미국의 협조 없

이는 지역 안정유지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태도는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4국간의 현실적인 외교행태는 실리위주로 전개되며 빈번한 정상회담을 통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특히 이라크 점령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란의 핵문제 등 국제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러의 지지를 호소함에 따라 미·일·중·러 4개국간에는 국익 우선의 실리외교가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가.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 강화

탈냉전기에 접어든 이후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낀 북한과 중국은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군사력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 경제위기에 시달리게 된 북한은 핵무장을 추구하고 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핵무장과 중국의 패권세력 부상에 따른 위협인식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핵무장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일동맹 강화를 부추기고, 미·일의 군사력 증강은 다시 중·러의 군사협력 및 전력 증강을 자극하는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7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17.8% 증가한 450억 달러로 공개하였으나, 미 국방부는 실제로 850~1,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

¹-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

미국은 2004년부터 지대공 페트리엇 미사일(PAC-3)과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 등의 MD체제를 실전 배치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길고, 대륙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형상도 식별 가능한 X밴드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장비들을 일본에 이전하고 MD체제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2010년까지 PAC-3, 레이저 항공요격기, 이지스 대공 요격함 및 전역 고고도 미사일방위망을 갖춘 MD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²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대응하여 미사일 공격 조기경보 우주 시스템을 복구시키고 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최신 형태육간탄도미사일 토폴 미사일(Topol-M)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³ 중국도 미·일의 MD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2007년 인공위성요격용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자국의 노후화된 기상위성을 격추시켰다고 보도(1.11)했다. 이로서 중국은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위성요격 실험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MD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우주공간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러 양국이 동아시아에 배치한 병력 규모는 크지 않다. 동아시아 군비경쟁은 실제로 일본과 중국이 각기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해·공군 전력의 최첨단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찰위성과 달 탐사선을 발사하는 등 우주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중 양국은 달 탐사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되는 우주기술은 대

²-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06』,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참조.

³- 국방부, 『2006 국방백서』,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06), 참조.

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규모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우주과학기술과 군사기술은 사실상 경계가 모호하다.

2007년 일본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1.9)시켜 군사력 증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세계 2위로 평가받는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의 핵심은 전투·첩보 기능을 겸비한 이지스함에 있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SM-3을 갖춘 이지스함 2척을 추가적으로 동해 및 동중국해 수역에 배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최근 전투행동반경이 1,200km로 한반도는 물론 중국 동부 산업지역까지 작전권에 넣을 수 있는 최신예기 F-22 전투기 10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미 하원은 F-22 전투기 수출금지규정을 유지한 2008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승인(7.25)하여 일본의 구매 의도를 무산시켰다. 한편,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998.8)를 계기로 총 4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여 2003년 3월 정찰위성 2기를 발사한데 이어 2007년 2기를 추가함으로써 동북아 일대를 24시간 감시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인우주선 발사에서 중국에 뒤진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달 탐사위성 ‘기쿠야’를 성공적으로 발사(9.13)하였다.

중국도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과 공군의 장거리작전 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최근 실전배치한 094형 핵잠수함은 사정거리가 8,000km에 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JL(巨浪) 2호’를 장착할 수 있어 미국의 서부해안까지 공격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중국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최신예 전투기 SU-27/30등을 도입하며 항공기술을 이전받는 한편, J(殲)-10을 자체생산 하여 배치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지휘기인 쿵징(空警)-2000을 제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향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J-13 및 J-14를 개발하여 2015년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⁴

중국은 미국을 목표로 한 CSS-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0여 기, 아시아지역을 목표로 한 CSS-3 ICBM 20여 기, 중거리미사일(IRBM) 14-8기, JL-1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미국과 유럽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사거리 12,000 km의 신형 대륙간탄도탄 DF(東風)-31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첫 유인우주선 ‘선저우 5호’를 발사(’03.10.15)하여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였다. 그 후 2005년 두번째 유인우주선을 발사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7년 중국 최초의 달 탐사위성인 ‘창어 1호’ 발사(10.24)에 성공하여 우주개발 사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과시하였다.

나. 미·일동맹과 아·태 민주연대 결성

2007년 미국과 일본은 양자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호주·인도·와도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였다. 미·일동맹의 연장선상에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일본을 방문한 호주 하워드(John Howard) 수장과 ‘일·호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채택(3.13)하였다. 동 선언에서 양국은 ‘외교·국방장관 정기협의회’를 신설하고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간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보다 긴밀한 협력

4-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참조.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 그 후 아베 총리는 인도를 방문하여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8.22)하고, 경제협력과 군사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포괄적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양국이 추진 중인 델리·뭄바이 산업벨트 프로젝트에 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3년 내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인 2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인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아시아 자유연대’를 창설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미국과 인도 정부는 워싱턴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7.17~20)하고 원자력 협정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협정은 인도에 폐연료봉의 재처리 권리를 인정하고 인도의 핵실험 재개 여지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 협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대해 예외적인 취급을 해서 원자력 협력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은 2년 이상 협상을 벌이는 진통을 겪었다.

미국·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 5개국은 인도양 벵골만에서 ‘말리바 2007’이라는 작전명으로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9.4~7)하였다. 이번 군사훈련에는 3척의 항공모함과 25척의 전함, 100여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다. 미국은 지난 8월 상하이협력기구(SCO) 6개국이 러시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응하여 ‘말리바 2007’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이번에 처음 미·일·호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호주·인도 4국의 민주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제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과도 경제·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베트남에 대해

서 헬기와 해양순시선 등을 판매하고 양국 사이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응웬 밉 쩌엣(Nguyen Minh Triet) 베트남 주석이 경제사절단 100여 명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6.19)하였다. 이로서 미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이와 같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온 미·일동맹과 미·일·호주 삼각 군사동맹은 최근 일본과 호주의 국내 정치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참의원선거(7.29)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여파로 인해 갑자기 사임(9.12)하였다. 아베 총리는 사임을 표명한 발언에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퇴임하는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난 6년간 인도양에서 미군 등 다국적 함대를 대상으로 급유지원 활동을 벌여 왔는데, 민주당은 유엔 결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찬성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참의원에서 이 법의 연장을 반대하였다.

중의원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9.25)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는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일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아베 총리가 추진해 왔던 헌법 개정 및 헌법해석 변경 작업은 보류되었다. 후쿠다 총리는 집단자위권에 관한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법적 시효가 만료되는 10월 31일까지 의회의 연장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 후쿠다 내각은 새로운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신(新)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중의원 본회에서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 으로 회부되었다(11.13). 그러나 참의원 내 제1당인 민주당은 유엔 결의

를 근거로 하지 않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찬성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11.16)하였다. 이 회담에서 후쿠다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양의 미 해군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호주의 정권교체도 미·일·호주 삼자 군사협력의 효율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을 적극 지지한 하워드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과 국민당 집권연합이 하원선거(11.24)에서 노동당에게 패배하였다. 케빈 러드(Kevin Rudd) 노동당 당수가 신임 총리로 임명됨으로써 호주는 11년 넘게 유지돼 온 보수파 정권이 막을 내리고 중도 좌파 정권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러드 총리는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온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호주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러드 총리는 이라크 주둔 호주군의 철군을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공표(11.30)한 바 있다.

다. 중·러의 군사협력과 세력권 확대

중국과 러시아는 미·일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블라디보스톡과 산둥반도 및 인근 해상에서 1만 여명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의 사명 2005’로 명명된 최초의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05.8.18~25)하였다. 그

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06.3.23)하고 정치·경제·군사·안보 전 분야에 걸쳐 양국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중·러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6년 중국은 '러시아의 해'를, 2007년 러시아는 '중국의 해'를 각각 기념하기로 합의하였다.

중·러 양국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합동군사 훈련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SCO) 6개국은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에서 '평화의 사명 2007'명칭으로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8.9~17)하였다. 이 합동군사훈련에는 6,500명 병력과 100대가 넘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이 참여하였다. 서방국가들은 SCO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나 중·러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중·러도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여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06.11.21)을 개최하였다. 양국 정상은 FTA 협정 체결 등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고 핵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해묵은 반목의 뿌리인 국경분쟁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싱가포르에서 회담(11.21)을 갖고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11.12)하고 군사·우주·통상 전반에 걸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 인도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5세대 전투기(Su-50)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은 2017년까지 무인 달 탐사선을 공동

으로 제작·발사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인도와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며 ‘미·일·호주 3각동맹’에 대응하는 ‘러·중·인도 3각 연대’가 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인도는 러시아의 제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남쪽으로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제4회 중국-아세안(ASEAN) 박람회가 광시(廣西) 장족자치구에서 개최(10.28)되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쑹페이옌(曾培炎)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측은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역내 항구들을 연계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3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가한 원자바오 총리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의 회담(11.20)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군사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남중국해 및 말라카 해협외의 항로 보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은 인근 난사(南沙)군도를 포함해서 서사(西沙)·중사(中沙) 군도와 260개의 섬·산호초·개펄 등을 관할하는 새로운 행정구역 산사(三沙)시를 신설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강화하자, 베트남인들은 하노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를 전개(12.9)하였다. 베트남 이외에도 이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은 중국의 행정구역 선포를 비난하고 있다.

라. 미·일·중·리의 실리외교와 갈등

2007년 일본과 중국관계는 급속히 개선되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경제인사 100여명을 동행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4.11)하고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에 합의하였다.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도 일본을 방문하여 동년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8.30)하였다. 양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의 상호방문에 합의하고,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직접 연결하는 군사직통전화(hot line)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후쿠다가 신임 총리로 취임(9.25)하면서 일·중간 화해·협력 분위기는 한층 성숙되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후쿠다 총리와의 회담(11.20)에서 양국관계가 전환기를 맞았다며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후 중국 군함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다. 중국의 최신 미사일 구축함 ‘선전호’는 도쿄만 요코스카 군항에 입항(11.28)하여 3일간 정박하면서 일본 방위성과 해군기지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중국 승무원들이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대한 시찰은 주일 미군측이 방위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항의함으로써 무산되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 등 6개 부처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를 처음 개최(12.1)하였다. 이 회담에서 쑹페이이엔(曾培炎) 중국 부총리는 에너지·환경 합작, 무역 투자협력 합작, 양국 기업간 협력 확대, 아시아 및 국제 경제문제 협력 등 4대 분야의 협력

과 합작 강화를 제의했다. 일본측도 경제협력 확대를 지지하며, 특히 중국 위안화 환율을 높일 것을 제의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중국을 방문(12.27~30)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지도부와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12.28)을 통해 ‘전방위 협력관계’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2008년을 청소년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환경과 에너지 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 후쿠다 총리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 독립 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접촉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2007년 워싱턴에서 제2차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개최(5.22~23)하여 폴슨(Henry Paulson) 미 재무장관과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 등 양측 대표단은 금융서비스, 에너지·환경, 민간 항공기 운항 부문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베이징에서 개최(12.12~13)된 제3차 중·미 경제전략대화에서는 중국산 식품과 공산품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워싱턴에서 개최(6.20~21)된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는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미 국무부 부장관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상무외교부 부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중간 외교·경제분야에서 협력이 증진되면서 군사분야 협력도 진전되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6.1)에서 장친성(章沁生)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조리는 미·중 핫라인 개설을 위한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밝혔고,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원하면 MD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 후 게이츠 국방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과 군사 핫라인 개설에 공식 합의(11.5)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을 개최(9.6)하였다. 이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현재의 중·대만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즉, 대만 정부의 유엔 가입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 반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공격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하는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주민들의 자치독립 문제에 간여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미 의회가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초청(10.16)하여 비폭력·인권옹호 노력 공로로 황금메달을 수여하자, 티베트 분리 독립 움직임을 우려한 중국 외교부는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중국은 11월 미 해군의 기뢰제거함 가디언호, 패트리엇호에 이어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의 홍콩 정박을 거부하고 잇따라 순양함 뢰벤 제임스호의 입항도 거부(11.21~24)하였다. 중국은 대만·티베트 등 내정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영역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간섭하는데 대해 쌓인 반감을 미군 선박 입항 거부로 표출한 것이다. 한편, 양체스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11.26)을 개최하고 북핵 6자회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체스 부장은 이란 핵문제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워싱턴에서 개최(12.3~4)된 제9차 미·중 고위급국방회담에서 미 국방부는 핵 정책과 전략, 프로그램 등에 관한 대화를 제의했고, 중국은 1999년 미 의회가 제정한 중국과의 핵관련 군사교류를 금지한 법안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미국은 중국이 미군 선박들의 홍콩 입항을 거부한데 대해 항의하였다.

2007년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동유럽 MD배치, 이란 핵개발, 러시아의 민주화, 코소보 독립 문제 등을 둘러싸고 외교적 마찰이 두드러졌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폴란드에 요격미사일, 체코에 첨단레이더망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이를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크게 반발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4.26)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 국경선을 따라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체코·폴란드에 MD기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러시아는 향후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약(CFE)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G8정상회담 개최(6.3)를 앞두고 미국이 동유럽에 MD기지를 설치하면 러시아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다. MD문제로 미·러간 신경전을 벌리게 되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10.12)하여 러시아 외무·국방장관들과 MD문제와 이란 핵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이란을 방문(10.16)하여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란의 평화적인 핵개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10.17)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 돌아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철군 시한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10.18)했다.

미국은 MD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동참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11.22)하였다. 미국은 체코와 폴란드에 MD기지를 구축하되 이들을 러시아 및 NATO의 MD기지와 통합 운영하여 미국·유럽·러시아의 공동안보를 증진시키고, 러시아 전문가들로 하여금 폴란드 내 미군 기지를 정기적으로 사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유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될 때까지 요격미사일을 폴란드에 실전배치하는 시기를 늦추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 MD배치가 자국의 핵 전력을 무력화시킬 것을 우려한 러시아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CFE 이행 중단을 확정하였다.

또한 미·러간에는 러시아 국내 민주화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이 인권·민주화 문제를 내세워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장기 집권 반대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야당 인사들과 시민을 대거 강제연행 했다. 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 선거의 비민주적 진행과정에 우려를 표명(11.26)했다. 12월 2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총선을 앞두고 유럽안보협력기구가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를 이유로 선거 감시활동 철회를 결정(11.26)하자, 푸틴 대통령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러시아 총선 감시활동 계획이 철회된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면서 미국을 비난하였다. 이 후 총선이 실시(12.2)되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미 백악관은 부정 선거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여 미·러간 갈등이 증폭되었다.

한편, NATO 26개 회원국은 브뤼셀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12.7) 하고 NATO와 러시아의 동반자관계가 동유럽 MD배치, 이란 핵문제 및 코소보 독립문제로 인해 도전적인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코소보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와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코소보는 아직 세르비아에 속해 있으나 인구 200만명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알바니아계가 무조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알바니아계의 독립을 결국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러시아는 일방적 독립선언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세르비아의 편을 들고 있다. 코소보에 평화유지군 1만 6천명을 배치하고 있는 NATO 회원국들은 코소보 알바니아계가 일방적 독립을 선언할 경우 세르비아의 반발로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마. 2008년 안보정세 전망

2008년에도 미·일 대 중·러의 느슨한 대립구도에 기초한 군비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미·일 양국은 2010년까지 PAC-3, 레이저 항공요격기, 이지스 대공 요격함 및 전역 고고도 미사일방위망을 갖춘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MD체제 구축과 더불어 우주공간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MD체제 구축에 대비하여 이지스함을 추가하

며 스텔스 전투기 개발 등 공군력의 첨단화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2010년까지 달 표면에 착륙해 탐사활동을 벌이는 셀레네 2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중국도 미·일의 MD체제를 능가하기 위한 첨단무기 개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2008년 Topol-M 미사일을 해상발사용으로 개량한 불라바(Bulava) SLBM을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하여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러시아 공군은 전폭기를 개량하여 핵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잠수함 개발 등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체 개발 및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통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초 자국의 노후화된 기상위성을 궤도에서 격추시키는 인공위성 요격 실험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며,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세 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7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한편, 인도도 우주경쟁에 가세하여 내년 4월까지 달 탐사위성 ‘찬드라얀 1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군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우주경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보다 유연한 신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내년에도 이라크 치안 안정, 이란 핵문제 해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정착 문제 등 중동지역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은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될 것이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점령정책의 실패, 미국 경

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화당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일본·호주·인도 등과의 민주연대를 강조하며 동아시아에서 공세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일본의 후쿠다 총리와 호주의 러드 수상은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미·일·호주의 삼각 군사동맹은 운영체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을 제일 중요시하는 일본 및 호주의 대외정책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참의원에서 소수당으로 전략하여 정국 주도력이 약화된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헌 등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후쿠다 내각은 미·일동맹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참의원에서 재가결하여 법안으로 확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이 집권한 호주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외교적 유대를 강화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간 갈등을 겪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는 회피하려 들 것이다. 미·일동맹의 핵심적인 동반자였던 호주의 이탈로 인해 미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아·태지역 안보전략의 기본구도를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동맹국들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아·태정책을 보다 유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보다 타협적인 성향을 보이며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8월 베

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미국·일본·유럽 등과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유엔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그 결과 미·중간 군사교류는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개방 확대 및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입지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중 양자협상과 더불어 일본·유럽 등과 함께 삼자회담 또는 다자안보회의의 구도를 통하여 중국에 대해 안보·경제 영역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후진타오 주석은 2008년 4월 경 일본을 공식 방문하여 ‘전략적 호혜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킬 것이다. 양국 정상의 관계개선 의지에 힘입어 일·중간 경제협력과 군사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역사 해석 및 동중국해 영유권문제를 둘러싼 고질적인 갈등 요인들에 대해서는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며 미·일 대 중·리의 느슨한 대립적 전략구도 또한 양국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역내 주도권 경쟁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은 중국과 안보·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도 군사적 투명성 증진 및 위안화 절상 요구를 점차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미·일·호주·유럽 및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총력외교를 펼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SCO 6개국 이 실시한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함께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일본과 협력을 증진 시키면서도 사안별로 거부하는 기본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008년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외교적 마찰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둔 후 푸틴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임기 만료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도 푸틴의 대외정책 기초를 유지함으로써 미·러간에는 동유럽 MD배치, 이란 핵개발, 코소보 독립 문제 등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러간에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 증대하고 있다는 비판과 부당한 내정간섭이 강화되고 있다는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코소보 문제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면 미·러관계는 한층 더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미·러관계가 악화되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 국내정치 문제로 인한 양국간 갈등이 북한·이란 핵문제 등 국제안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력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민주화 관련 압력수위를 상황에 따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김국신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 북핵문제

2007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5차 6자회담의 3단계 회의(2.8~13)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되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2006년 7월의 미사일 발사와 10월의 핵실험으로 가파르게 상향곡선을 그리던 한반도의 긴장지수가 일단 중단된 데 있다.

2·13 합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단계 조치> 3월 13일 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5개 실무그룹의 가동을 개시함: ①한반도 비핵화, ②북·미 관계정상화, ③북·일 관계정상화, ④경제·에너지 협력, ⑤동북아 평화·안보체제.

- 4월 13일 이전까지 북한은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영변 소재 핵시설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관의 감시·검증 활동을 재개하도록 조치하며, 핵포기 대상으로서 신고해야 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에 대한 협의를 개시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5만톤을 제공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및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북·미 대화를 개시함.

<다음단계 조치>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완료하고,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실시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지원을 실시함.

2·13 합의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합의 이행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기운이 찾아오는 것같이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마카오의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의 송금이라는 커다란 암초가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가 미국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뉴욕의 연방은행까지 동원해서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자금을 러시아를 경유해서 보내줌으로써, 2·13 합의는 이행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송금이 완료되는 것과 거의 같은 시점에 북한은 IAEA 전문가팀의 방북(6.26~29)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허용했다. 뒤이어 북한은 외무성대변인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지되었다고 공식 발표(7.6)했고, 7월 중순 IAEA 사찰관의 봉인과 검증 조치를 수용했다. 2·13 합의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끝냈어야 할 5MWe 원자로의 폐쇄와 봉인 조치가 거의 100여 일이나 지연된 것이다.

북경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개최(9.27~30)되어 2·13 합의의 후속합의로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제2단계 합의가 도출되었다. 합의에서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의 핵심 시설 세 곳(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완료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도 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물질과 기술 및 노하우를 외부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협력 현장으로 의심되어 온 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9.6)한 후 북한의 핵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 바 있다. 제2단계 합의는 북한이 문서상으로 핵비확산 약속을 한 최초의 문건이다. 아울러 불능화와 신고의 대가로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과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불능화와 신고 작업이 당초의 기대와 달리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는 2008년도 상반기에 중요한 분기점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신고는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완전한 신고를 거부한다면 북핵문제는 협상국면에서 제재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다. 핵무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집착과 그간의 행태를 감안할 때, 2008년도 북핵문제의 전망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었다. 우선 북한은 5MWe 원자로에 대해서 폐쇄라는 말 대신에 가동중지라는 표현만 사용해왔다. 7월 6일자 외무성대변인의 발언도 “핵시설 가동중지 과정에 실제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이다. 폐쇄가 재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반면에 가동중지는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표현이다. 5MWe 원자로가 노후화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가동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폐쇄라는 용어가 북한 당국의 핵폐기 의사를 보다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제네바 기본합의 때와 달리 IAEA 사찰관이 영변 핵단지에 상주하지도 못하고 있다. 2007년 6월 IAEA 사찰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AEA 전문가팀이 영변을 방문해서 북한과 합의한 문서에도 사찰관이 상주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이는 영변 핵단지 내에서 사람과 기계에 의한 모든 핵활동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불능화의 수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한·미 당국은 2008년도부터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불능화의 수준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연 2008년부터 핵폐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핵폐기는 2·13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며, 핵폐기 협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2·13 합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은 핵폐기 협상과 연계해서, 한·미 군사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보장조약 체결 금지 등 ‘북한식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즉 북한은 6자회담 본회담과 비핵화 실무그룹을 북·미 핵군축 회담의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보고해야 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놓고서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플루토늄 프로그램,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핵무기 및 핵실험 시설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영변 핵시설에서 “군사용”이라는 이유로 제네바 합의당시 사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두 개의 시설도 이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보유국이 된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한 채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지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인도와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 전성훈 ·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가. 한·미 관계

2007년도 한·미관계에서의 핵심적 사안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의 재조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북핵 문제였다. 그리고 한·미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은 노무현 정부가 ‘균형적 실용외교’라는 명분 아래 추구한 한국의 ‘주체적’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미 관계의 추구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정향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미 안보동맹관계는 한국 방위의 ‘한국군 주도, 주한미군 지원’ 방향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10월 한·미 군사위원회(MC) 회의를 통해 ‘한국군 주도, 주한미군 지원’ 개념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에 합의하였다. 같은 달 열린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특징으로 하는 동맹구조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양국 국방 당국 간의 협의채널을 유지시키기로 하고 새로운 협조체제로서 군사협조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19일 양국은 ‘한·미 군사동맹구조 연합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 약정’에 서명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유엔사령부의 정전관리책임 조정을 위한 협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어 2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을 2012년 4월 17일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전환하기로 하고, 이와 동시에 한·미 연합사령부(CFC)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2007년 상반기 중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공동이행계획을 작성하고, 11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SCM에서 동 계획에 합의하였다.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한·미 안보협력구조 변화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국내적인 갈등요인이 되었다. 2007년 2월 한·미간 최종 시설종합계획(MP) 협이가 완료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3월말까지 팽성지역 잔류주민 218세대의 이주가 완료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3월 20일 서울 용산의 미군 기지를 2012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2004년 국회보고 대비 1,300억원이 증가된 4.6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동 계획은 최종 MP가 SOFA 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되고 사업관리용역업체(PMC)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부지성토 공사가 착공되었다. 주한미군 기지 중 반환하기로 한 부지는 제9차 SPI(2006.7)에서 SOFA절차에 따라 반환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07년 1월~4월에 SOFA 환경분과위/시설구역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3일 SOFA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상반기 중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등 14개 기지의 반환절차가 종료되었다.

한·미간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의도 지속되었다.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는 2007년 중 제11차 회의(2.7~8, 서울)를 비롯하여 제12차(4.16, 워싱턴), 제13차(6.8, 서울), 제14차(7.27, 호놀룰루), 제15차(10.19, 워싱턴) 등 5차례가 진행되었다.

2006년 6월 5~9일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공식협상으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긴 협상과정과 양국내의 찬반 논란으로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미 FTA는 양국의 통상 확대와 자본의 자유 이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양자관계를 보다 질적으로 심화 발전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미국에 원정 시위도 하는 등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6년도에 다섯 차례의 협상을 가진 한·미 FTA 협상은 2007년 1월 15~19일간 제6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7차(2.11~14, 워싱턴), 제8차(3.8~12, 서울) 및 고위급협상(3.26~4.2, 서울)을 거쳐 4월 2일 마침내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어 미국 측이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에 걸쳐 협정의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서 추가 협상을 하여 6월 29일 타결되었다. 미국은 한국 측의 요구 사항인 사증(비자)면제와 전문직에 대한 이민쿼터 확보 등에 대해 약속했다. 한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과 관련 한·미 기술협의회 제1차 회의는 한국 측 외교부·법무부·건교부·경찰청, 미국 측 국토안보부·국무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7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회의는 11월 6~7일간 역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미국 측이 한국을 포함한 VWP 가입 희망국들의 비자 거부율 조건을 신중적으로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달성하려고 했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양국은 국내적 비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한국과 미국 공히 국내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2007년 연말까지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북핵 문제는 연초에 북·미 간 베를린회담을 계기로 해법을 찾게 됨에 따라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마지막 날인 2월 1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핵 문제가 진전 국면을 맞이했다. 이어 제6차 6자회담 제1단계 회의(3.19~22)와 수석대표 회의(7.17~20), 제2단계 회의(9.27~30)를 거쳐 10월 3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를 도출하였다. 6자회담을 진행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정책적 조율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007년 1월 19~20일간 방한한 것을 비롯해 11월 29일~12월 3일간 방한까지 7차례 서울을 방문, 한국 측과 협의하였다. ‘2·1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에 대한 봉인·폐쇄를 비롯한 초기 단계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10·3 합의’에서 북한이 2007년 연말까지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예정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05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현안은 물론 지역 및 범세계적 사안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괄적 협의를 하는 전략대화 출범에 합의하고 장관급 전략대화(2006.1.19, 워싱턴)를 한 차례 가진 후 차관급 전략대화(2006.11.7, 서울)를 개최한 바 있다. 2007년에는 10월 11일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제2차 차관급 전략대화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번영 증진 등 지역문제, 한·미 동맹 발전방안 등 한·미 양국관계 주요 현안, 그리고 국제평화·재건, 대테러 및 비확산 협력 등 범세계적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이 밖에 2007년도에 한·미 양국은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9.7)하였고, 다섯 차례의 외교장관회담(1.5, 3.2, 5.3, 6.28, 9.6)을 갖는 등 각급 수준에서의 회담을 통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2007년도에 상기와 같은 한·미 관계가 전개되었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정상 간 신뢰 관계 등 한·미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한·미 안보동맹의 조정문제는 국내정치적인 갈등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캠페인과정에서 유력한 야당의 후보는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2008년도의 한·미 관계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한·미 동맹 강화를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보수 세력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미국 측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배경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12월 20일 전화통화를 통해 첫 대면을 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에 방문할 것을 초청하였다.

이러한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됨에 따라서 2008년도의 한·미 관계는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동맹관계의 발전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 바탕은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구축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08년 2월 25일 한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이명박 당선인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종교에서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작은 정부라는 기본적 가치관에서 공통점이 많다. 정치리더십 간의 돈독한 신뢰구축은 전반적인 한·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 관계의 신뢰회복 및 미래지향적 발전은 변화된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고,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및 국가이익과 세계질서 주도국가(super power)로서의 미국의 국가발전전략 및 국가이익이 상당한 공유점을 찾을 때 실효성이 있게 도출되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관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로의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 다양한 양자관계와 지역적 차원의 양자관계 및 다자관계, 그리고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21세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시금석은 2007년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은 북한의 핵 불능화 및 핵 신고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정책협력이 될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국 신정부의 또 다른 핵심과제이며 신정부가 정립할 대북정책 방향과 함께 한·미 관계의 강화·발전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 및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난 정부와는 달리 정책 노선과 추진 방법에서 대화와 외교적 압박의 병행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 요구에 부응하지 않거나 미·북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취하면서 강하게 대응해 나올 경우의 한·미 간 창의적인 정책협력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이다.

한·미 FTA의 비준문제도 2008년도의 한·미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2월 25일 신정부가 출범하지만, 11월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미국은 본격적인 후보자 경쟁과정에 들어간다.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들은 타결된 한·미 FTA를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 따라서 2008년 상반기 중에 한·미 양국에서 비준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발효는 미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할 2009년도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신정부가 FTA 비준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한국의 신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차원에서 FTA의 발효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신정부에게는 출범 후 국내정치적으로 당면할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사안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FTA 발효는 미국에서의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정치과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한국의 미국 VWP 조기 가입에 촉매제로 영향을 줄 것이다.

안보적 차원에서의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 문제는 한국의 신정부 아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의 안보·국방전략에 따른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되 한국의 보수 신정부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문제 시기가 한·미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8년도의 한·미 관계는 정치 리더십 간의 신뢰 형성을 배경으로 지난 몇 년과는 달리 돈독한 양상을 보이면서 발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실은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 전략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과 수단에서의 차이와 상보 관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정책 추진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다.

● 박영호 · 기획조정실장

나. 한·중 관계

2007년 한중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킨 한 해로 평가된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 방문국, 흑자국, 투자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부상하였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문제는 물론, UN, APEC, ARF 등 각종 국제 및 지역무대에서 상호입장 지지 등 협의와 협력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한중 양국은, 2006년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제5차 6자회담의 1·2단계 회의에 이은 3단계 회의(2.8~13)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1.22~23) 및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중(1.25~27)을 통해 양국은 6자회담의 일정 및 의제를 상호 조율했다. 이 회의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를 도출하고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3.15~23)에서 재확인하였다.

BDA문제로 인해 ‘2·13합의’의 이행이 지연되자, 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한(4.10~13)과 3차 한중 외교안보대화(북경, 5.16)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회담(6.3) 등을 통해 2·13합의의 조기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7.17~20)를 거쳐 2단계 회의(9.27~30)에서 ‘9·19공동성명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합의)’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커다란 이견 없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와 협력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연내 북핵 불능화를 위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실무그룹(W/G)의 주재 또는 참여를 통해 상호 협력하였다. 또한 양국간은 동북아의 주변정세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시드니, 9.7)과 한중 정상회담(싱가폴, 11.18~22)은 물론 한중 외교장관회담(8.2, 9.8, 9.28) 등을 통해 양국간의 공동 관심사가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10.2~4)에 관해서도 양국은 상호 협의하였다.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연기 배경과 결과를 중국 측에 설명(10.9~10)하였고,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또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대한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하였다.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은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방문(4.23~26)해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을 통해 양국은 군부대 간 핫라인 설치, 공동탐색 및 구조훈련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사상 최초로 상하이에서 해군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8.31~9.3)하였다. 양국은 핫라인 설치를 통해 NLL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국방정책 실무협의도 개최(11.1)해 2008년 양국 군사교류계획과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양국 군간 협력증진 방안도 협의하였다. 따라서 수교 후 군 인사교환과 위탁교육생 파견 등 군사교류 위주의 관계에 머물렀던 양국의 군사안보 관계는 군사협력의 수준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의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2007년 1월부터 11월 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약 747억 달러, 대중 수입액은 약 573억 달

러로, 같은 기간 수출은 18.1%, 수입은 30% 증가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입 국가가 되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무역흑자가 전체 무역흑자인 약 159억 달러를 상회하는 약 173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도 증가하였다.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도 확대되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의 방한(3.12)을 비롯,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3.27), 제14차 한중 무역실무회담(6.11), 14차 한중 경제공동위(12.4~6), 원자바오 총리 초청 한덕수 총리의 방중(12.10~11) 등이 성사되었다. 또한 한중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1년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1차(3.22~23) 2차(7.3~4), 3차(10.24~26)에 걸친 회의가 개최되었다. 중국은 4월 10일 방한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한·중 FTA에 관한 공동연구의 조속한 결과를 공식 촉구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에 있다.

한중 양국의 협력은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역내 다자협력으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시안에 총영사관이 새로 개설(9.20)되고 광주에 영사사무소도 신설(3.23)하는 등 양국관계의 폭과 깊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른 한편, 양국간의 증대된 교류 협력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우리 선박인 ‘골든로즈’호가 중국 선박과 충돌하여 16명이 사망한 사건(5.15)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사건처리 미숙과 자국 이기주의를 노출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의 협력을 위해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노동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문제, 불법체류자문제 그리고 탈북자처리문제와 탈북자지원 한국인의

보호문제 등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동북공정문제가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역사왜곡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양국간의 갈등 요소로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2008년에도 양국관계의 마찰 및 갈등 요소로 지속되어 양국간의 협상·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북핵문제는 한중 양국의 정치외교관계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2월에 출범할 한국의 신정부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이 북핵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에 이은 폐기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중 외교안보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한중 외교안보 협력의 속도는 다소 조정 내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신정부가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점, 2007년 10월 새로 출범한 중국공산당 17대에서 나타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큰 변화 없이 실리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점, 중국이 2008년 8월에 개최될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원한다는 점, 한중 양국 간 경제교류와 협력의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협력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한중 FTA에 관한 공식적인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어서 양국의 협력은 활발하게 모색될 것이다. 다만, 농수산물 등 민감한 분야의 보호방안 등에 대해 양국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중국 측의 적극적인 양보가 없는 한 협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병곤 · 기획조정실 연구위원

다. 한·일 관계

아베 총리의 등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외교가 전개되면서 한·일관계는 냉각상태를 벗어나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서울 한·일정상회담(06.10.9)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의 구축에 노력하는 것이 합의된 이후, 한·일간에는 양국의 외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교류는 물론 인적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7년에 접어들면서도 한계 속의 관계개선을 향한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정상회담의 개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한·일 외무장관회담의 개최 등이 이루어졌다.

2007년 1월 14일 필리핀의 세부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아울러 공동성명도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에서는 한·중·일 3국간의 인적 교류 및 경제·무역교류 등을 위한 협력, 환경문제 등 한·중·일 3국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한·중의 이해와 협력, UN 개혁과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진출과 관련 한·중의 이해 및 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이어 한일외무장관 전화회담(1.25)이 이루어졌다. 북한문제, 9·19 공동성명의 이행문제 등에 관한 전화회담이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방일(2.25)하여 규마 후미오 방위청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으며, 한일 합참급 긴급연락체계의 활성화, 2008년부터 한국 국방시설본부와 일본 방위시설내국간의 정례교류의 시작 등에 합의하였다.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장관회담(3.31)에서는 과거사 문제의 이견이 여전히 나타남에 따라 송민순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게 되고, 이에 아소 다로 외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자국 정부의 입장으로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한·일안보대화의 재개, 외교부 북미국장 회의의 개최 등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역사문제에 의한 한계 속에서 미래지향형 한·일관계를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송민순 외교장관과 아소 다로 외상은 이집트의 샤름 엘-셰이크에서 회담(5.5)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주도에서 한·일·중 외교장관 제주도회담(6.3)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내각개조(8.27)에 의해 아소 다로 외상의 퇴임전 까지 전화회담(6.21, 8.9)을 갖기도 하였다. 6·3 제주도회담에서는 한·중·일 3국간에 에너지 안보와 환경문제 등의 공동대응, 3국 투자협정 체결의 가속화 등이 합의되었다.

아베 개조내각이후, 송민순 외교장관은 마치무라 노부다가 신임외상과의 회담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합동각료회의의 진행 중에 가졌다. 시드니 한·일 외무장관회담(9.6)에서 송민순 외교장관과 마치무라 노부다가 신임외상은 북·일 관계 개선문제와 납치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의해 아시아외교를 중시하는 후쿠다 내각이 등장하게 되면서 한·일관계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후쿠다 총리의 취임(9.25) 직후에 가진 한·일정상 전화회담(9.28)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덕담을 하였고, 나아가 후쿠다 총리는 국회에서의 첫 소신표명 연설(10.1)에서 적극적인 아시아외교의 전개를 선언하면서 “한국과 미래지향형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11.20)을 가졌다. 한·일 정상은 작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시에 가진 양자회담(06.11.18)이 후 약 1년만에 양자회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한일정상회담(11·20)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김정일위원장의 북일관계 개선의지 등에 관해 설명하였고, 후쿠다 총리는 북일대화를 통해 납치문제와 과거청산문제 등 북·일간 제반 현안을 해결나갈 것을 설명하였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고, ‘한국인 강제 징병 징용자 유골’ 가운데 ‘101위’가 2008년 초 반환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그러나 한·일관계에는 여전히 영유권문제, 과거사문제 등 갈등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고, 국민적 정서도 내재되어 있다.

후쿠다 총리의 재임 기간 동안은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추구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향후 한·일관계는 아시아외교를 중시하는 후쿠다 총리의 재임 기간동안은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을 향해 비교적 원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정호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한·러 관계

한·러 양국은 교역 및 투자, 자원, 에너지, 우주항공,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 점을 평가하였고, 러시아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면서 남북한·러 3각 경협을 실현을 희망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9.9)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교역 및 투자, 자원, 에너지, 우주항공,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여수 박람회(2012) 유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송민순 외교통상부장은 상호 방문을 통해 한·러 외무장관회담(6.5, 서울; 8.31, 모스크바)을 개최하고 북핵문제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 아프간 피납 사태, 우주기술·에너지·자원 및 철도 분야 등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여수 박람회 유치 지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한인 동포들의 영주귀국과 현지생활 지원 확대, 에너지 외교의 활용 등을 위해 사할린의 주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영사관을 개설(7.3)하였고, 이규형 신임 주러 한국대사가 푸틴 대통령에 신임장을 제정(7.27)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지지하였고 한반도에서 안보와 평화의 시대를 열수 있기를 희망하였다(10.3).

북핵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시드니 APEC 정상회의에서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9.9)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 기여한 데 대해 평가했으며, 양국 정상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협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13 합의’에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안 준비 및 협정 체결 과정에서 자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러시아의 참여 이유는 첫째, 구소련이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구소련의 계승국으로서 그 책임도 부담해야 하며,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평화조약의 내용으로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의 비무장화, 북한이 주장하는 일본의 보상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면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3.4)함으로써 러시아 국적 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해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철도운영자회의(6.16~18)에서 러시아철도공사와 한·러간 합작물류사업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007년 하반기에는 시드니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러 통상 장관회담(9.6), 모스크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러 경험 위합동회의(9.14), 서울에서 제4차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10.12), 모스크바에서 한·러 경제공동위(12.12~14) 등이 연이어 개최

되었다. 이 회의들에서 양측은 최근 양국간 경제·통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러 교역 및 투자 증진, 자원·에너지와 극동시베리아개발 협력, TSR-TKR 연결, APEC 및 OECD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대러 차관문제와 관련, 양국이 서명한 대러 ‘경협차관 상환협정’(2003.9)에 따르면, 러시아는 당시 잔여분 13억 3,000만 달러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실시할 ‘3차 불곰사업’(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 필요성과 양국이 합의할 경우 현물로도 상환할 수 있다는 상황협정 부속조항에 따라서 기존 입장을 변화시켰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군사기술협력 실무회의(9.10~11)에서 양국은 러시아가 남은 12억 9,500만 달러를 현금과 현물 각각 50%로 상환하고, 현물은 군사기술협력과 완성 장비를 5대 5의 비율로 한국에 제공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가 현물로 상환됨에 따라 현금 상환기한을 2025년에서 2010년대 초까지로 앞당기는데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한국은 현물 중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방호설계기술 등 핵심기술협력을 확대해줄 것을 러시아측에 제안했다.

이외에 한·러간에는 연해주 발해유적 공동 발굴조사(6.28~8.3), 양국 변호사회 교류협력협정 체결(7.24),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확대사업 실시(9~11월), 서울에서 제4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11.6) 등이 이루어졌다.

2008년에도 한·러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기초로 실질협력 증진 및 호혜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의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개발 프로그램’을 위

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23억 달러의 연방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송유관 등 인프라 건설, 철도 물류망 개발 등을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그동안 한·러 우주협력의 결과,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에 탑승(2008.4)하여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8일간 머물 예정이고, 연말에는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이 발사될 것이다.

- 여인곤 · 동북아연구실장



I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2007년 동안 북한의 대외 정세는 미국과의 핵협상에서의 진전, 한국과의 정상회담 개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크게 호전되었다. 그러나 대내적 정치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정책, 이데올로기, 행사들에서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다만 내부 정치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예년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하부 조직 다지기 사업, 사상 오염 방지 사업, 농민시장에 대한 단속, 중급 간부들에 대한 여러 종류의 중앙검열 등이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최고인민회의(4.11), 내각 확대회의(4.18, 10.23), 김정일(2.16)과 김일성(4.15) 생일, 인민군 창건 75돌(4.25), 정권 창건 59돌(9.9), 김정일의 당 총비서 추대 10주년(10.8)과 당 창건 62주년(10.10),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6주년(12.23) 등 여러 연례 정치행사들은 예년과 큰 차이없이 개최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7년 총 86회의 공개활동을 했는데, 그 중 군 38회, 경제 17회, 대외 14회, 기타 17회였다. 상중반기에는 경제부문에, 하반기에는 군사부문을 주로 시찰했다. 8월 29일에는 4년만에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총 2만7천390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이는 2만6천650명을 선출했던 2003년 8월 선거 보다 740명이 늘어난 숫자이며, 2만9천442명이 선출되었던 1999년 선거보다 2천52명 줄어든 것이다. 이 선거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함경남도 함주군 추상협동농장에서 투표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주민등록 조사와 숙박검열을 실시되었다.

권력구도와 엘리트 변동 차원에서 볼 때 북한 정치는 2007년에도 안정적이었다. 김정일의 지위가 확고한 가운데, 최고 지도부의 주요 인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3월경에는 국방위원회 참사였던 김양건이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11기 5차 회의에서 총리직에서 박봉주가 해임되고, 육해운상인 김영일이 새로 임명되었고, 국방위원 김영춘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되었다(4.11). 박봉주는 평남순천 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행정책임자)으로 좌천되었다. 4월 14일에는 중장 10명, 소장 45명 등 총 55명의 장성에 대한 승진 인사가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연초(1.3)에 사망한 백남순 외무상의 후임으로 전문외교관료인 박의춘이 임명되었다(5.18). 장성택은 당중앙위 제1부부장에서당중앙위 부장으로 승진되었다(10.4 이후). 태종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가 내각 부총리로 임명되었다(10.16).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의 제1비서에는 김경호가 해임되고 리용철이 선거되었다(12.7).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공식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2007년 동안에도 예년처럼 김정남과 장성택 연합설, 김정철의 우세설 등 추측이 보도되었다.

사상 사업 차원에서 보면, 북한당국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내세웠던 것처럼, “5.25 교시 40돌을 맞아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 정책을 추진했다. 5월 3일과 9월 20일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은 평양에서 제34, 35차 전원회의를 갖고 사상사업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농근맹’ 및 ‘여맹’ 하반기 회의(10.24, 10.25)에서도 북한 당국은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 및 임무를 강조하였다. 2007년에도 강조되었던 것은 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 혁명적 낙관주의, 사회주의 건설은 계급투쟁, 전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리, 다

른 나라 도움 받아도 자주를 고수할 것, 제국주의 사상문화침투 경계, 선 군사상으로 일색화, 민족적 혁명적 자부심, 군민대단결 등이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개혁 보다는 동원적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개혁 개방에 대해 경계심을 환기했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 핵을 가진 강국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7년에도 계승되었으나, 실제상으로 뚜렷이 경제정책이나 대내 정책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은 4월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계기로 신임 총리를 임명하면서 개혁개방을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모두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 즈음하여, 북한 중앙당은 전국 각 지방 고위급 관리를 대상으로, “조선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절대 개방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부는 2007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검열을 통해 정치치안을 강화했다. 북한 당국은 2007년 각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신년공동사설(신년사) 관철 결의 모임’을 작년 ‘사업총화’(업무결산)에 대한 ‘사상투쟁’ 방식으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북한당국은 4년 만에 ‘전국법무일꾼대회’를 열고(2.28) 사회생활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당국은 외교관과 무역상사원 등 해외근무자들에게 3월말까지 자녀 1명만을 남기고 평양으로 돌려보내도록 지시했다(2.14). 중앙당 검열그루빠의 3~4월과 9~10월의 신의주 세관 집중검열도 있었다. 함경북도에 대해서는 4월말부터 중앙당 비사회주의 그루빠(그룹 검열단)가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검열을 시작했다. 5월 들어서는 20여년 만에 중앙검찰소 검열 성원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 전격 파견됐다. 이러한 검열은 국가보위부, 보안서, 중앙당, 호위사령부 등의 검열에 이은 것으로, 주요 검열 대상은 보위부와 보안서, 재판소, 도당, 시당, 인

민위원회 등 단위 책임자들이었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나 중앙당검열 그루빠는 일반 주민보다는 권력층과 신흥부자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한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대내정치적 기강잡기는 후반기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었다. 김정일은 8월 26일 “시장이 비사회주의의 서식장(양식장)으로 되었다”고 교시했다. 이러한 김정일의 8월 26일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장 통제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개인들의 이동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가 10월에 발행한 문건 내용에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비사회주의인 현상에 대해 적당히 대응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침에서 후반기에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에겐 핸드폰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함께, 새로운 조치로서 유선 전화 사용 증대를 통한 내부 통신이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시도도 행해졌다.

같은 맥락에서 2007년 동안 북한당국은 말단 지배조직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의 일환으로 13년 만에 ‘전국 당 세포대회’가 열렸고(10.26~27), 15년 만에 ‘전국 지식인대회’가 개최(11.30~12.1)되었다. 두 대회 모두 표면적으로는 “경제강국 건설”에서 당세포와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2008년에도 북한의 내부 동향은 상층 권력 구조에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정권과 사회간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상황에 영향을 주는 배경요소는 2007년 큰 수해의 여파로 2008년도에는 식량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한국의 신정부의 대북지원 지속 여부, 미국의 대북지원 개시 여부 등이다. 대외지원의 지속 여부

에 따라 북한 내부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중하부 간부에 대한 통제에서의 어려움, 식량사정의 악화로 인한 시장활동 증가 압력, 중국과 한국의 영향에 따른 문화적 원심력의 증가 등이 그러한 어려움이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은 2007년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내부 정치 치안 단속을 유지 또는 강화해야 것 이외에 뚜렷한 다른 대응책이 없을 것이다. 특히 중앙 통제가 약화되는 가운데 중하급 관료의 부패와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권과 일반 주민 사이의 괴리를 증가시키며, 중앙으로의 경제잉여가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안보 차원에서 중하급 간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될 것이다. 나아가 중간 간부층 뿐 만아니라, 일반 주민의 직장이탈과 사상해이에 관한 것도 정권 안보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따라서 2007년도에서와 같이 일면 중간 간부층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면서, 타면 말단 지배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정책 방향으로 볼 때 대외 안보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북한 당국은 내부 정치 안정을 기초로 생산증대를 위해 동원식 사상·경제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김정일의 대내 행보와 발언, 각종 기념행사에서의 공개 연설 및 정치의례의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 박형중 ·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경제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추세는 크게 세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실질성장률이 소폭이나마 (+)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발표한 실질성장률은 2000년 3.2%에서 2004년에는 4.0%로 소폭 증가하는 등 2000년 이후 북한의 실질 GDP는 (+)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는 북한이 발표하는 상업적 대외거래가 거의 균형을 이루거나 (한국과의 무역을 포함하면)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중앙통계국은 2004년 (한국과의 무역을 제외한) 자국의 대외거래 수지적자 규모가 8,100만 달러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의 상업적 거래액을 더하게 되면, 북한은 이 해 소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간 북한경제를 짓눌러온 식량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 북한의 전반적 식량사정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의 현지 관찰에 따르면, 아직도 북한의 한계계층은 일정한 식량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반적 식량사정은 1990년대 중후반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식량부족에 따른 경제위기의 확산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경제는 그간의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 향후의 경제회복을 위한 일정한 물질적 기초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이러한 추세가 본격적인 경제성장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북한의 거시경제동향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경제회복에 두고 ‘농업증산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 ‘경공업혁명을 통한 인민소비품결정적 증산’,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에의 역량집중’을 주요 경제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이전 해의 경제목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북한경제가 여전히 주요 생필품의 부족이라는 기초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올해 11월 조선중앙방송이 발표한 경제성과에 대한 총평에서 “무더기 비와 큰물로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지만 경제회복이라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비록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발전소와 같은 올해의 주요 인프라 건설실적과 중요 공장에서의 생산정상화 소식을 경제회복의 현실적 성과물로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올해 북한경제 역시 2000년 이후 지속되어온 (+)의 실질성장률 추세를 여전히 유지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의 실질성장률이 과연 본격적인 북한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할 것이다. 이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올해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북한경제에는 경제회복세를 근원적으로 가로막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뚜렷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우선 북한 핵문제라는 장애요인이다. 물론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군사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 북한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해외자본의 이용 가능성 역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과 일본의 외교관계 악화 역시 또 다른 장애요인이다. 과거 일본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가운데 하나였으며, 북한이 해외에서 벌

어들이는 경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나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 핵문제가 제기되고 일본인 납치문제마저 불거져 나오으로써 북한과 일본의 무역은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에 놓여 있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우회하기 위해 과거 일본과의 거래를 중국과의 거래로 대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의 거래는 일본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낮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제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과 한국과의 거래 역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물론 한국과의 무역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한국은 북한이 상업적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경화수입의 거의 전부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과의 무역은 금강산이나 개성과 같이 휴전선 지역의 일부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 아직 북한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 역시 한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경화를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여러 의문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감안하며, 올해 북한경제 역시 예년처럼 소폭의 (+)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연결되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올해 북한경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세가지 기본적 장애요인이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그간의 6자 회담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가 실행되고, 이에 따라 미국 역시 북한을 기존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로 구체화된다면, 북한으로서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

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물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오랜 적성국의 실질적 경제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새로운 환경이 구축되는 셈이다. 그간 북한경제의 회복을 근원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국제시장에서의 북한의 위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만일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 역시 시간문제일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그간 잃어버렸던 가장 수익성 높은 경제적 파트너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또한 북한은 올해 11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남북경협 확대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금강산이나 개성에 머물러 왔던 남북경협이 북한 내륙의 중요 경제지대로 확산되고, 그 규모와 질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2008년은 북한경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간 북한경제를 짓눌러온 기본적 장애요인들이 모두 해소되어 이전의 소폭의 (+)의 성장세가 이제는 본격적인 북한경제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추론이 옳다면, 2008년 북한경제의 모습은 긍정적으로도 또한 부정적으로도 전망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북한당국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감한 경제개혁 또는 개선조치들을 쏟아 낼 가능성이 있다. 북한경제를 둘러싼 근원적 외부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렛대로 그간의 체제위험 때문에 미루어왔던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들을 한꺼번에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북한경제의 모습은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글을 통해서만 논의해왔던 사회주의 경제의 본격적 개혁의 모습이 북한경제에 그

대로 투영되어 나타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북한당국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내부적 경제통제를 되살리려 할지도 모른다. 북한경제의 외부환경이 호전되고 이에 따른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면, 이를 지렛대로 그간의 경제위기로 인해 방치해 두었던 각 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여 내부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위험요소를 일거에 제거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만일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 북한경제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경제가 보다 나아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급성장했던 시장과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행위가 또다시 위축되는 조금은 기묘한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한편, 2008년 남북경제관계의 발전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 역시 흥미로운 대목이다. 2008년도 남북경제관계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 의해 그 기본 틀이 새롭게 정비되어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그간의 남북경협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일 북한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발맞추어 경제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남북관계에 호응하고 나온다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2008년은 새로운 개혁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그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한국정부에 대해 이른바 ‘길들이기’ 또는 ‘버티기’ 전략으로 나온다면, 2008년 북한 내부적으로도 개혁 보다는 통제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 이 석 · 남북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다. 사회

2007년 북한은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서는 많은 전향적 변화를 보였지만 대내적으로는 사회통제가 강화된 한 해였다. 6자회담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진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남정책에서의 큰 변화 등의 주변 정세 변화가 체제 내부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내통제가 강화된 된 것은 대외적 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공식부문 경제의 와해와 더불어 비공식 부문에서 시장요소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체제해체와 사회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장사와 돈벌이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청년 학생들까지 학교 공부와 학업을 등한시 하여 체제의 재생산이 불확실해질 정도이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1992년 이후 15년만에 노동당 주최 ‘전국지식인 대회’를 11월 30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하여 북한 사회 각부문 지식인들로 하여금 본래의 맡은바 과업에 복귀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대회는 전국의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부문 수천명의 지식인들을 상대로 “9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여년간은 조국 역사에서 최악의 고난과 시련의 시기였다”며 국방과학, 농업, 사회과학, 문학, 교육, 보건, 체육 등 각 부문에서 지식인들이 선도자적 역할과 헌신적 노력을 벌여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시장요소의 확대에 인한 사회기강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하여 장사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8월 29일부터 화장품 등 장사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화장품 등은 남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령대 단속도 강화하였는데 처음에는 30세 이하의 장사를

금지하다가 이어서 40세 이하, 45세 이하로 장사 금지 연령을 더욱 확대하였다. 장사할 수 있는 장소도 허가된 시장 안에서만 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장사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하여 북한은 “시장 장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근본원천이다. 시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빈부 격차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장사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북한은 사상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9.19)은 사상을 외면하면 하루아침에 사회주의가 붕괴된다고, ‘사상사업 흡시는 사회주의 붕괴의 요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7년 북한의 사상교육의 내용은 “선군사상의 일색화”이다. 교육내용을 선군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하여 전학년에 걸친 과목별 교과내용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8.30, 조선중앙방송). 북한은 선군사상 강조와 더불어 ‘선군시대 공로자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군시대 공로자라는 새로운 모범영웅의 개념을 만들어서 주민 통합에 활용하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자면 온 사회에 약동하는 기상과 혁명적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평양방송은 11월 19일 김정일 시대라는 선군시대 10년 동안 모두 100여명의 ‘선군시대 공로자’가 배출되었다고 밝히며, 이들이 시대정신을 체현한 주체형의 새 인간형, 인민군대를 닮은 선군형의 혁명가, 혁명과업 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애국자 등으로 찬양하였다.

북한 당국은 남한 CD 등 외국 CD와의 전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청소년들 사이에 한국 영화보기가 유행하는 것에 경계심을 갖고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인민보안성 포고문(7.4)이 나온 이후 처벌이 더

육 엄격해지고 역적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전자다매체, 컴퓨터방, 전자오락실, 노래방 등을 통한 반사회주의 사상 유포를 막기 위한 일체 단속을 시행 중이다.

북한은 ‘비사그루뵀’ 검열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각종 활동들을 비사회주의적이라는 명분으로 통제하고 있다. 무역회사, 외화벌이 회사를 대상으로 마약밀수, 밀매를 단속하며 무직, 건달, 가정교사, 집에서 돈받고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약장사 등을 집중적으로 검열하고 있다.

탈북자 통제도 강화하고 있는데 국경연선에 철조망, 감시카메라, 전파 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경연선에 10세대를 1개조로 묶어서 탈북 사건이 생겼을 경우 나머지 가족도 연대 처벌하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핸드폰 및 시외전화도 단속하며, 핸드폰 사용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숙박검열도 심하다. 간첩 색출 명분으로 숙박검열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탈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경지역에 외지인의 출현을 경계하며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다.

간부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6자회담을 통하여 핵 포기를 대가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자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간부를 대상으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부의 지원이 들어온다. 핵을 포기한다 등 여론에 맞춰 오래지 않아 우리도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는 헛소문이 돌고 있어 사회민심을 소란시키고 당과 장군님에 대한 불신임을 초래한다”는 명목 하에 사상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6자회담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우리식대로 사업하고 생활할데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간부들에게 사상 교육(7월 중순)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북한은 ‘강성대국’이라는 통치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만 세우면 강성대국(11.27, 노동신문)이라는 논리로 지

난해 핵실험 이후 경제에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 이후 북한이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추진해온 세가지 과제인 사상·군사·경제 중 사상과 군사목표는 어느정도 달성했으니 이제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해의 성격에 있어서도 10월에 핵실험을 했던 2006년에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가는 해”로 규정했으나 2007년에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 3월 첫 대회이후 13년만에 열린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대회’가 10월 26~27일 양일간 열렸는데 대회의 목적이 대외적으로는 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경제재건 의지를 과시하자는 것이었다. 대회 첫날 노동신문 사설도 대회의 목적이 ‘경제건설과 생활향상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있다고 논하면서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라는 국가과제에 관해 당조직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는 한편, 경제활성화에 관한 국가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최태복 당비서는 폐막사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혁명적 진군에서 당세포들이 당의 말단기층조직으로서, 당행정 관철의 기본전투단위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자면 당세포비서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사업기풍, 일본새(일하는 태도)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공식경제는 거의 붕괴되고 가내수공업, 장사로 자력갱생하는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력갱생 체제 하에서 지역별로, 공장기업소 단위별로, 가구별로 최저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 지역에도 군 단위 농업 부문이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방식이다.

강성대국이라는 북한당국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식량난은 지속되고 있다. 수해로 말미암아 곡물생산량도 감소되었고, 군량미 우선 공출 등으로 농민들의 노동의욕도 상실하였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되어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8월 3일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45세미만은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뜸하던 아사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좋은 벗들’에 의하면 6월말부터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 일부 시, 군 단위에서 하루 평균 10여명 안팎의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온성군의 통계에 따르면, 6월부터 한두사람씩 발생하던 아사자가 7월 들어서면서 증가하였고, 읍에서만 80여명 이상의 아사자가 나온다고 한다. 함흥시의 경우 2007년 7월 현재 아사자가 300명이상 발생하였다고 한다.

민심이 매우 흉흉한 편이다. 장사에 대한 통제가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항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주는 것은 없으면서 장사도 못하게 하느냐? 주는 것은 없으면서 나라에서 내라는 것만 많으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견 앞은 자리에서 굶어죽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 세상에 어디 이런 법이 다 있는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장사는 왜 못하게 하는가? 이것은 백성을 죽이자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장사에 대한 통제는 하급 관리 마저 주민쪽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북한주민들은 더 이상 이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각자 제 살길을 찾아 떠나려는 사람도 많다. 김정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운 장군님 어디에 계십니까’라는 노래가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장군님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의 불만과 힐난의 의미로 부르고 있다. 배급도 안주는 체제에서 충성과 지지에는 관심이 없어졌다. 정치적 책임이 없는 한에서 “제

불 장을 보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최고의 관심이다.

2008년도 북한 사회는 금년과 유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갑자기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 핵문제 해결이 부시행정부 임기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지만 미국 공화당 내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동 대 행동이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면 북한이 얻게 될 경제적 보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이다. 김정일이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를 완료하고 미국이 호응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제와 불만의 상승작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사를 계속 통제할 경우 소규모라도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장사로 자력갱생하는 현재의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외부 정보의 확산도 지속될 것이다. 이를 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통제도 계속될 것이다. 작용과 반작용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이다.

● 서재진 · 북한인권연구센터장

라. 군사동향

2007년도 북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선군이데올로기 확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군혁명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선군혁명을 위한 인민군대의 기능과 역할을 부각시켰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최고 사령관 김정일의 제일결사대, 제일총폭탄으로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군사권력 핵심조직을 강화·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최고인

민회의 제11기 제5차회의(4.11)에서 총참모장 겸 국방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영춘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시키고 인민군 총참모장에는 김영춘 대신 김격식 대장을 새로 임명하였다. 전임 연형묵 부위원장 사망(2005.10)으로 인한 공석을 메우는 인사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급을 전원 군부인사로 충원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조직이 강화되는 모습을 띠게 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이용무·김영춘, 위원으로 김일철·전병호·최용수·백세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명령 제0010호(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를 통해 중장 10명, 소장 45명 등 총 55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하였다(4.14, 중방). 리명수(전 총참모부 작전국장)를 국방위원회 참사로, 김명국(전 108기계획군단장)을 총참모부 작전국장으로 새로 임명하였다.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에 박재경 대장에서 정태근 중장으로 교체, 박재경 대장은 인민무력부 대외사업 담당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은 하부단위 군부대까지 현지도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 직접 챙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말단군부대를 포함한 전군의 충성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도 김정일의 공개활동이 총 86회이며 이중 군부대 시찰이 38회(12월 18일 기준)로써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정치훈련 및 전투동원 태세를 견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 당의 훈련 제일주의 방침 하에 전투정치훈련 강화하고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대비한 전투동원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하는 정치·군사적 슬로건을 반복하였다. 마찬가지로 ‘군민관계’ 강화를 위해서 인민군대는 사회의 본보

기(모범)로 사회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 ‘군인품성’을 적극 본받도록 독려하였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공업을 군사경제력의 기초로 인식하고 자위적 국방공업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국방공업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2007년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4.11) 국가예산부문 발표에서 군사력 강화사업을 경제부문보다 차 순위에 언급하면서 소폭 축소된 국방비 비중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2008년도에도 북한은 선군정치 강화를 위한 군사력 건설에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정치훈련 및 전투동원 태세를 독려하게 될 것이다. 2·13 핵합의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전투정치훈련 강화,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에 대비한 전투동원태세를 요구하는 선전선동 활동을 확대할 것이다. 체제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군민관계’ 강화를 위한 전국적 행사를 변화 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경제부문의 교류협력 활동을 확대하는 반면 군사부문의 교류협력 활동은 다소 제한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군사장비 및 기술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성은 있으나 경제부문의 외교활동을 우선하게 될 것이다. 대남관계 차원에서도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비군사적 교류협력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대남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군사적 강경정책을 가능한 한 자제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장성급 회담 및 군사실무회담 재개와 같은 대남 군사적 유화책을 펴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정영태 · 북한연구실장

2. 주요 대외관계

가. 북·미 관계

2007년 북·미관계는 미국이 양자회담에 대한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시작하였다. 2006년 말 비공개로 추진된 북·미접촉의 결과 미국의 힐(Christopher Hill)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베를린에서 6자회담 재개방안 및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1.16~18). 베를린회담에서 미국은 BDA의 북한관련 계좌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북한의 핵 시설 동결 및 봉인에 따른 에너지 등 지원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북·미 양자접촉의 결과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의 초기이행조치가 나왔다(2.13). 특히 2·13합의에서 5개의 실무그룹 구성이 합의되었으며, 이 중 하나가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이었다. 뉴욕에서 김계관 부상과 힐 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첫 회의가 개최(3.5)되었으며, 스위스에서 2차 실무회의가 개최(6.1)되었다. 회의에서는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고농축 우라늄(HEU)을 포함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등 양국관계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이 북한을 방문(4.9)하여 한국전쟁 당시 미군 실종자 유해 송환에 대해 협의하고 6구의 유해송환이 실현되었다.

BDA 북한계좌의 법적문제로 이행을 지연되던 2·13합의가 6월 러시아의 협조로 BDA 문제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미관계는 해빙

무드에 들어갈 수 있었다. 8월 북한이 뉴욕 필 하모닉의 평양공연을 초청하고, 미국 측이 이를 긍정 검토하여 2008년 2월 26일 뉴욕필의 평양 공연 실현을 앞두고 있다. 미 군함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북한 선박 구출작전(10.30)을 펼치는 등 달라진 북·미관계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미 군함은 북한 선박에까지 병사들을 보내 의료 및 다른 지원을 제공했다. 해군 위생병 3명이 승선조와 함께 북한 선박으로 가 부상자들을 치료했고, 중상자 3명은 윌리엄스호로 옮겨 치료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화물선 ‘대흥단’호 구출작전에 대해 미국에 사의를 표명하면서(11.8) 미국의 반테러 전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북·미간의 금융관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금융실무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어(11.19~20) 달러화 위폐 제조 등 북한의 기존 불법 금융활동 근절과 향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북·미관계의 순항 속에서도 인권문제 등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북·미간 신경전은 지속되었다. 미 국무부는 4월 5일 발표한 2006년 인권지원 활동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인권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도 김정일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9.7)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주변 민주국가들의 국민들과 같은 자유를 향유하는 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 비판에 대하여 북한도 강력히 대응하였다.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 공세” 대상국을 선별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공세는 세계를 미국화·서방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하였다(9.13). 평양방송도 미국의 반테러전을 비난하면서 미국을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공격했고(9.11) 박의춘 외무상은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인권 및 문화다양성’에 관한 비동맹운동(NAM)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인권옹호를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타민족의 운명을 농락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9.4).

국가안전보위부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정보기관의 간첩활동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자리에서 “오늘 적대세력들이 각종 모략단체와 비정부기구들까지 발동을 해서 인권분주탕을 피우고 있다”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이고, 제도전복을 위한 도구이고,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9.5).

6자회담 합의문을 통해 연말까지 북한이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치는 대가로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약속하기도 하였다(10.3). 6월 21일 첫 방북에 이어 12월 3일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여 핵프로그램 신고와 북·미관계 진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회담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은 UEP에 대하여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북한과 시리아의 핵 커넥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일본의 반발 등과 겹쳐서, 북·미관계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되었다.

2008년 북·미관계는 대단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북한의 성실한 불능화 이행여부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속한 처리 여부가 향후 북·미관계의 난관이다. 2·13합의가 가능하였던 것은 불능화 개

념의 모호성에 있었으며 10·3합의에서 미국은 초기 구상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불능화에 동의하였다. 예컨대 2·13합의에서 미국은 불능화를 원자로에 시멘트를 붓는 등 폐기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10·3합의에서 불능화를 5메가와트 원자로, 재처리시설, 연료봉제조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 플루토늄 생산의 중단에 국한하였으며 불능화의 기간도 최대 1년을 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능화나 핵프로그램 신고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북·미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북정책의 불확실성 역시 비핵화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이후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의 목표를 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불능화 이후의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라크, 이란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임기 말로 접어드는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교적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개선보다는 북핵문제의 현상관리에 우선 목표를 둘 가능성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회의적 인식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최진욱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북·중 관계

북한이 2006년 10월 초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하여 온 중국의 정책이 제고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의

선택은 대북 강경태세로의 선회였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찬성함으로써 2007년 2월 6자회담 2·13 합의가 있기 전까지 북한과 소원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2·13합의 직후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여(2.15) 6자회담에서 북·중 양국의 협력 하에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 상반기까지 없었던 대북 군사 교류를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총참모장인 량광리에(梁光烈)가 북경에서 북한 인민무장역량부 외사국 국장 안영기가 이끄는 북한인민군대표단을 면담하였다(3.27).

중국의 강력한 추구하고 미북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BDA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자(6.15), 중국 외교부 부장 양제츠(楊潔篪)가 방북하여(7.3) 북한 노동당 총서기 김정일과 공식회담을 가졌다. 상기 회담에서 중국 외교부 부장은 북한의 조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를 추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6자회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추구하고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7.15) 중국은 이를 환영하고 2·13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및 북일 관계정상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표명하였다. 이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경을 방문(9.4),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진행상황과 북핵 불능화 조치와 관련된 계획을 알려주었다. 6자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해외이전을 하지 않겠다

는 북한의 약속에 환영을 표시하였다(10.6). 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 핵 개발 관련 신고가 지체되자 중국은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대표를 북한에 보내 북한의 성실한 신고만이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12.17).

2·13합의이후 2007년 말까지 북한의 불능화 조치와 북미 정상화 과정에 대해 북·중 양국의 통보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북핵 실험 직후와는 양국 관계가 보다 협력적으로 전개되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후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외교 및 경제제재에 참여하면서부터 북한에 대해 생존 차원의 원유와 식량 지원을 제외하고는 중국기업의 대북 교역과 투자가 크게 위축되거나 중단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변경무역만은 공식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7년 북한이 6자회담 2·13 합의에 동의함에 따라 북·중 경제 관계는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2·13합의 이후 중국 외교부는 북·중 경제무역관계는 반드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호한다는 입장과 북·중 간의 공동이익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중국의 이웃나라로서, 북한의 경제와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2.15). 북·중 경협은 북한의 제10회 평양 봄 국제상품 전시회(5.15)를 계기로 진전되었다. 이어 7월 3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을 방문(7.3), 북한 외무상 박의춘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다시 강조하였다.

류샤오밍 북한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무역성 부상 이명산과 세관부국 부 중국장 김의준 등 관련분야 인사들을 초청, 북중 경제무역관계가 적극적으로 발전한 데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단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9.6). 이어 류 대사는 함경북도

공식 방문, 라선시의 라진항, 라선신흥연초회사, 청진항, 청진금속합영 회사를 시찰하였다(9.16).

2·13합의 전후 북·중 교역과 관련, 북·중 교역이 신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1월~8월까지의 양국간 교역 총액은 12억 5천만 달러로 2006년에 비하여 16.7%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수출액은 8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하였고, 수입은 3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8% 증가하여 수입 증가율이 수출의 4배에 달하였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007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 비하여 수출입 총액이 16.7%나 증가하여 양국 교역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의 대북 투자와 관련,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약속한 이후부터 중국의 대북 투자가 재개되고 여건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북·중 평양 합영사료공장이 생산에 들어갔다(4.10). 평양-베이징 노선 중국 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의 주3회 운항이 재개되었다(4.26).

북·중 양국은 투자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평양에서 ‘북·중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7.11) 2005년 3월에 체결된 북·중 투자보호 협정에 이어 양국간 투자촉진과 기술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중국의 탕산(唐山)철강이 북한의 김책市에 연산 150만 톤 생산 규모의 제철소와 60만kw급 석탄 발전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10.20).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 북핵 실험이후 중국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북 송유를 지속하고 있으나 교역차원의 대북 석유를 감소된 양으로 수출하였다. 2007년 상반기의 대북 원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2007년도 대북 지원 규모는 2006년도 보다 증대되고 있다. 북핵 실험이후 북·중 경제 관계는 그동안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양국 교역관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북·중 양국 정치, 안보 관계의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는 미북 정상화 논의 속도와 수교 협상으로 인해 북·중 정치, 안보 관계 발전은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미북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정치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정치 관계 발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사전에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정치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나 북한의 수동적인 그리고 곡예 성향의 외교 전략으로 인해 한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중국의 촉구인 양국 정치 지도자, 국회, 정부 고위관료 들의 상호 교류와 정기적 방문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과 핵계획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미북 수교가 실현되지 않는 한, 북한이 과거의 핵무기까지 폐기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우선 완전한 폐기 검증 완료보다는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의 성실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성실한 신고를 위한 중국의 대북 외교가 2008년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핵 불능화 조치 수준과 대북 평화적인 핵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표출할 것이다.

양국간 교역 규모와 분야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북 수입이 2008년도에도 증가율을 보여 북한의 대중 수출이 확대되고 교역액이 2007년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 역시 중국은 북한의 제1무역 대상 국가로 나타날 것이다. 아

올리 중국의 대북 투자는 향후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에 치중될 것이며 투자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춘흠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북·일 관계

아베 정권은 납치문제의 해결에 최역점을 두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제5차 3단계 6차회담에서 북핵문제 못지않게 자국의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데 주력하였고, 2·13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대북 에너지 지원에 동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의 납치문제 최우선, 에너지 지원 불참 등으로 2·13 합의에 따라 설치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working group)도 경직되었다.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3.7~8)되었는데, 납치문제, 과거청산과 보상문제 등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일본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경직성은 북한의 일본에 대한 극심한 감정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특히,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건물 경매 문제와 관련,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고육책이 무산되면서 조총련과 북한은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었고 북·일은 거의 최악의 갈등상태를 노출하였다. 북한은 노동신문, 평양방송, 민주조선 등 북한의 언론매체와 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를 동원하여 일본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하였고, ‘제2 BDA 금융제재’라고 비난하였다(7.6).

일본 검찰의 정치적 고려 수사, 조총련의 심각한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의 경매 문제는 북·일관계의 개선

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전략적 재료로 활용될 소지도 적지 않았다.

북·일 양국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7.18~20)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였고,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9.5~6)에서도 관계진전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는 납치문제만을 다루었던 3월의 베트남 하노이 회의와는 달리 과거청산과 납치문제를 병행하여 협의되었으므로, ‘평양선언에 기초해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쌍방이 성실히 노력한다’는 합의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 속의 북·일관계는 아베의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새로운 기회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 직후, 일본적십자사는 13일 아베내각이 결정한 대북 수해지원의 무기한 연기 방침과 관계없이 국제적십자사·적신혈사연맹(IFRC)의 요청에 응해 3천만엔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후임 후쿠다 총리는 납치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욕을 표명함과 더불어 압박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역점을 둔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을 시사하였다.

후쿠다 총리는 국회 소신표명연설(10.1)에서 대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북한의 납치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최대현안인 납치문제의 해결, 국교정상화의 실현 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베정권이 결정한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방침’을 후쿠다 정권이 ‘실행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후쿠다 정권은 각료회의에서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으로 결정하였다(10.9).

후쿠다 총리는 대북 정책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중시하지만 납치문제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납치문제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방침’을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후쿠다 총리는 ‘대북 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 결정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심양 북·일 비공식 회의’(10.14) 등을 통해 북한측에게 납치문제의 가시적인 성과에 따른 북·일관계의 진전시, 대북경제제재의 조기 해제를 설명하였다. 심양 북·일 비공식 회의는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의 사전조율을 위해 개최되었는데, ‘연내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대화를 가속화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제6차 2단계 6자회담과 관련, 후쿠다 정권은 10월 3일 발표된 합의문에 대해 후쿠다 정부는 ‘완전한 신고가 아니고, 불능화도 전부가 아닌 몇 개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정부분 평가와 함께 승인 결정을 내렸다. 또한, 후쿠다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10.2~4)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아시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를 전망하면 매과 아베 총리의 사임과 비둘기파 후쿠다 총리의 등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북미관계의 진전 등은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후쿠다 총리가 대화 중시의 대북정책 노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납치문제 등 북·일관계 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북·일 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국교정상화 문제, 과거 청산 등의 현안이 있지만, 악화된 국민들의 대북 인식 및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해 납치문

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 배정호 ·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라. 북·러 관계

러시아는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려 노력 하였으나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가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러 3각 경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러시아정부 내 저명한 한반도문제 전문가 중 한 인사인 수히닌 (Valeri Sukhnin)이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로 취임(1. 18)하였다. 그는 부임 직전 “우리의 목표는 현 (북핵)상황에도 불구하고 양자관계를 발전·심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협력을 발전시키려면 채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06.12.29).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10.2~4)와 관련, 러시아는 이를 지지하면서도 통일의 길은 멀다는 반응을 보였다. 로슈코프(Alexander Losyukov) 외무차관은 “양국 내에서 남북한 교류와 통일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양국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9.24)하였다. 라브로프 (Sergey Lavrov) 외무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안보와 평화의 시대를 열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10.3).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2·13 합의’이후 BDA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지자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BDA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중개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관련국들은 북한에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해결안을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2·13 합의’가 채택되자 러시아 정부는 이를 환영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로 종료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 채택 당시 상실되었던 러시아의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하였다. BDA문제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를 발효(5.30)시켜 국제적 대북 제재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BDA 동결 북한자금의 러시아로의 이체를 요청하자 러시아는 ‘달콤뱅크’(극동상업은행)내 ‘조선무역은행’ 계좌에 입금(6.19)하여 미 재무부의 BDA 조치 이후 21개월 만에 BDA 북한자금 문제가 완전 종결될 수 있었다. 러시아는 검색국면에 빠진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북 영향력과 신뢰도를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부시 미 대통령도 러시아가 BDA문제 해결에 앞장선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7.3)하였고,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2·13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안보·군사면에서, 러시아는 ‘2·13 합의’를 통해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협상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안 준비 및 협정 체결 과정에 러시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구소련이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구소련의 계승국으로서 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둘째,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면에서,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가 북·러 경

제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러시아는 북한과 양자 및 남북한과 3자 경협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양에서 제3차 회의('00.10)가 열린 뒤 7년 만에 모스크바에서 제4차 '조·러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위원회'가 풀리코프스키(Konstantin Pulikovskiy) 환경기술원자력감독처장과 림경만 무역상이 각각 양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교역증진, 전력, 금속, 농임업, 교통 등 총 13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3.23). 상기 위원회 개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문제를 상호 적절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나 실질적인 탕감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둘째, 러시아의 잉여 전력을 대북 송전하고 북한 내 전력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북한은 평양 동쪽에 100MW 규모의 두 번째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과 구소련 시절 평양과 북창에 각각 400MW, 1,600MW 규모로 세워진 발전소 보수작업에 러시아 기업들의 참가를 희망하였다. 넷째, 러시아의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나진 소재 승리화학공장을 개보수하겠다는 의향을 북쪽에 전달하였다. 다섯째,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협이가 계속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 결과, 4월 말 러시아 철도회사와 북한 철도성 대표들은 평양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러시아의 하산역부터 북한 나진항까지의 약 55km 철도구간 현대화를 위한 합영기업을 창설하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간 철도가 연결되면 나진항에 위치한 정유공장인 승리화학공장(연간 처리능력 200만 톤)을 개보수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한 뒤 이 중 일부는 북한이 사용하고, 일부는 러시아로 다시 수입하게 된다. 또한 러시아 산업에너지부는 블라디보스토크-나진-청진으로 이어지는

송전망을 연결해 러시아 극동의 잉여 전력을 북한에 수출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2년 북한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단계 까지 갔다가 북핵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는 남북한간 선린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TKR-TSR 연결 등 남북한·러 3국간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러시아는 TKR-TSR의 연계운행을 포함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 2030년까지 총13조 루블(약 5,200억 달러)을 투입하는 장기투자 계획을 확정(9.4)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간 경제협력도 이루어져, 사할린주 통상경제협력 실무그룹과 북한 ‘국제무역 촉진위원회’는 평양에서 무역·경제 협력에 관한 회의를 갖고 의정서에 조인(11.14)했다.

2008년에도 북·러 관계는 메드베제프 대통령-푸틴 총리라는 러시아의 지도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러시아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핵프로그램 신고나 핵폐기 과정에서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 북·미간 타협 유도를 위해 중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차 ‘조·러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 위원회’가 평양에서 개최되면 양국 경제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인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를 재협상할 것이나 러시아가 대부분 탕감을 하지 않는 한, 양국간 입장차이와 환율문제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조인된 북한·사할린주 의정서에 따라 북한 노동자 3,500여 명이 사할린으로 보내져 건설, 벌목, 수산가공, 농업 등의 분야에서 작업할 예정이다.

● 여인곤 · 동북아연구실장

3. 대남동향

2007년 북한의 대남동향은 지난 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소원해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 데 협력하는 한편 그 이념적 정당화로 민족공조를 즐기치게 요구한 것으로 집약된다.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남한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사용가능한 협상카드를 모두 소진한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적 보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북한은 그동안 체제지탱의 골간을 중국에 의존해 왔으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중국이 동참한 데 대해 실망하고 중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 듯하며, 마지막 협상카드인 추가 핵실험을 사용할 경우 가해질 국제적 제재를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핵능력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로부터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대남관계에도 적용되었다.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해줄 나라는 남한뿐이라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이는 2003년 이후 공식으로 있던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에 국제사정에 밝고 유연한 김양건 국방위원회 참사를 3월중순 임명한 데서도 간취할 수 있는데, 이는 대남업무라인의 구심점 정비와 함께 남북관계를 국제정세와 조율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었다.

북한은 ‘2·13 합의’ 당일, 전날에 제의된 남한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남북대화 복원을 내심 원하고 있었음을 나타냈고 그후 합의된 남북장관급 회담(2.27~3.2, 5.29~6.1)과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5.17), 정상회담(10.2~4), 제1차 총리회담(11.14~16), 제2차 국방장관회담(11.27~29) 등을 차질없이 이행했다.

‘평양방송’은 “민족자주는 통일위업 실현의 기본 핵”이라는 보도(11.27)를 통해 “남북관계가 우리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상상할 수 없었던 통일운동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남북관계 진전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국간 회담과 협력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제6차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1.28)에서의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6·15 공동선언 7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의 평양 개최 등 사회·문화분야 중심으로 각종 남북 공동행사의 개최에 합의하는 등 대남 민간 대화 및 협력도 적극 수용했다.

이러한 대남협력의 이념적 정당화는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였다. 민족공조는 남한의 대북 경험 및 지원의 명분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사회내의 반미 감정에 편승하여 미국을 화해·협력의 방해 주범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로동신문’(12.6)은 2007년을 “우리민족끼리 이념이 발휘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07년 신년 공동사설과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1.17), 김정일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2.5) 등을 통해 대남관계에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이라는 3대과업의 실천을 요구했는데, ‘민족중시’는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 배격’, ‘평화수호’는 ‘미군철수투쟁 강화’, ‘민족단합’은 ‘친미반동보수세력 매장’이었다.

‘민족중시’와 관련하여 ‘로동신문’은 “남북관계발전은 서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는 보도(3.14)를 통해 민족중시가 남북관계 발전의 기

본입장임을 강조하고 외세를 배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RSOL/FE: 3.25~31)에 대해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이하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3.10)했다. 또한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8.20~31)에 대해서도 ‘조평통’ 대변인 담화(8.2), ‘로동신문’ 논평(8.23) 등을 통해 비난했다.

‘평화수호’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장본인인 바, “미군 철수는 조선반도 평화수호의 중요담보”라며 민족의 장래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전평화를 위해 미군철수를 주장해야 한다(평양방송, 2.21; 조선중앙방송, 2.24)고 강조했다. 미군철수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되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한미군 유지비 분담금관련 발언을 비난 하면서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30호는 미군 유지비 분담금 증액 언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남조선 인민들은 미군철수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5.4)했다. 또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도 대변인 담화(6.29)를 통해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평양방송’도 한미행정협정 체결 41주년을 맞아 주한미군 철수 및 동 협정 철폐 등을 요구(7.9, 7.12)했다.

‘민족단합’과 관련하여서도 “남조선 당국은 민족의 단합을 해치고 동족을 적대시하며 대결을 추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시급히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철폐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에 대한 투쟁과 우리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세력의 재집권 저지 등을 선동했다. 이의 일환으로 북한은 ‘조선중앙방송’ 보도(10.14)를 통해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 지시를 비난하였고 ‘로동신문’ 기사(10.16)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그리고 보수세력에 대한 투쟁의 선동

으로서 ‘로동신문’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북한 및 대북정책 관련 발언을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5.26)했고 ‘조평통’ 대변인(3.27)과 ‘조국통일연구원’(6.6), ‘조선중앙방송’(7.17)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전환논의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미쳐 날뛰던 한나라당이 돌변하여 대북정책 조정을 표방해 나선 것은 시대와 민족의 버림을 받은 자들의 궁여지책이고 자기의 흉악한 정체를 숨기기 위한 또 하나의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2008년은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등 김정일체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강성대국을 국가목표로 내세운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정권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적 곤란이 불가피하다고 선전해 왔으나 핵무기 개발로 이제는 경제건설에서도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해를 2012년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2008년에도 북한은 2·13합의와 10·3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라 미국과 관계개선 전망 등 대외적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에 자신을 가지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남관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반기 동안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하에서 체결된 남북한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대북정책 기조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 이교덕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III

남북한관계

1. 남북대화

가. 남북정상회담

남측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하에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북측이 늦게나마 전격적으로 호응해 오으로써 남과 북은 2007년 8월 5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정부는 발빠르게 2007년 8월 8일 청와대에서 2007년도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2차 남북정상회담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그 결과 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4일간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양정상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2007남북정상선언’, <표 1> 참조)을 발표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건 정상회담 자체는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의 결심을 직접 이끌어 내어 남북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실천단계가 이행되어 가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문제해결을 동시에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안보협력 등이 논의되고 있는 6자회담들의 진전과 병행하여 남북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변영과 동북아의 평화변영을 위한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을 강조하면서도 남북합의의 장전이라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간의 관계설정이 과제로 남겨진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한반도의 평화변영과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및 우방국의 지지확보 노력에 소홀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간의 유기적인 병행 추진이 과제로 부각되었다.

둘째,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이라고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도록 하는 데 공감한 것이다. 남측이 아리랑공연을 관람한 것도 이러한 차원의 대승적인 조치로 이해된다. “상호 내정 불간섭” 명시는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의 제기 차단을,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각각 의미하는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회 등 분야별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 합의는 우리가 요청했던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를 확대·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방장관급회담 재개를 포함하는 남북간 군사분야 협력증진에 관한 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은 향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선결과제이며, 또한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문제에 관한 한 구체적인 내용합의

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비록 선언적인 성격을 띠기는 했으나, 남북국방 장관회담의 11월 개최에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남북 군사대화의 격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관련국 정상들과 종전선언 추진”은 부시 미대통령이 “북측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상황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을 활용하여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한 남북한의 주도적인 노력을 과시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은 정상회담의 결과가 다시 6자회담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적 구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좀 더 명시적으로 재확인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고, 종전선언의 당사자 및 시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문제가 대두되었다.

다섯째, “남북 경협사업의 활성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을 통해 양 정상은 경제협력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한반도평화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남북의 동반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중국적으로 단일 경제권을 추구해 나간다는 장기적, 지속적인 경협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은 남북경협을 확대 발전 시키는데 요구되는 과제들, 즉 통행·통신·통관문제 해결 및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측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 북측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다. 현재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우리가 제기한 “남북경제공동

체” 건설에 대한 개념적, 의지적 합의에는 북한이 화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 NLL 재설정에 관한 국내·외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여섯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발전”을 통해 당국 차원에서 포괄적인 사회문화협력이 합의됨으로써 그간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문화교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경제분야와 함께 남북관계의 저변을 확대·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축으로서의 남북간 접촉면을 확대하여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외연을 확대하여 남북관계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특히 2008 북경올림픽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통해 참가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회문화적 차원을 넘는 새로운 차원의 남북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 개최합의문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6·15공동선언’을 뛰어넘어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제도적 활성화”에 합의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일곱째, “인도주의 협력사업의 적극 추진”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시급을 다투며 전개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며 남북화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크게 진일보한 조치다. 남북자 및 국군포로문제에 관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여덟째,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장한 것임과 동시에 전세계 한민족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개최 및 정상간 수

시 협의 합의”에 그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차기정상 회담의 개최 시기, 총리회담의 정례화 등에 관한 합의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어려운 국내·외적 환경에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은 개최가 힘든 만큼 그것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상호 신뢰형성의 초기 단계에 놓여 있고, 남북관계에 놓인 사안들이 남북 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한계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2008년도는 1998년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비전과 새로운 대내·외 정책방향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도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을 위한 남북협력에 호의적으로 반응한 것도 2008년도에 새로운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위한 대내·외 정치·안보적 및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핵문제의 해결에 지속적인 의지를 보일 경우, 2008년에는 양자적 혹은 다자적 차원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2008년에 출범하는 신정부와도 북한은 가능한 한 기존 남북관계의 탄력을 이어가고자 할 것이다.

<표 III-1>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

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손기웅 · 평화기획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남북 총리 및 장관급회담

2007년 남북 총리회담이 11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총리회담은 남북 정상회담(10.4, 평양)에서 합의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회담의 장이었다. 남북 양측은 정상선언 이행과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조 49개항의 합의문

을 채택하였다. 총리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진전, ▲문산-봉동 화물열차 연내 개통, ▲철도·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착수, ▲조선협력단지 조성 방향 등에 합의하였다. 총리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후속회담이 개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2008년에는 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총리회담의 재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장관급회담은 두 차례 개최되었다.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열려(2.27~3.2), 양측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 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②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③민족적 화해와 단합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고,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④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제5차 화상상봉 실시(3.27~29),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실시(5월 초순),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사업 빠른 시일 안에 추진,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 사항들 협의 해결 등). ⑤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평양 개최(4.18~21),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 실시 등). ⑥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서울 개최(5.29~6.1)에 합의하였다.

제20차 장관급회담의 성과와 의의는 남북대화 중단 7개월 만에 열린 회담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데 있다. 이 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남북대화와 주요사업 일정을 구체화하고 이미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점검, 이를 진전시키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대화 정례화·제도화 문제도 논의하였다. 또한 북측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 비난은 내정 간섭 행위임을 명백히 밝히고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비난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에도 배치될 뿐더러,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한 점이 돋보였다.

한편 제20차 장관급회담은 ‘2·13 합의’ 이후 열리는 첫 남북장관급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가능케 했다. 이는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가속화에 대한 남북간 공동인식을 담은 합의문 도출로 나타났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지금까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회담 기간 내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설득 결과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문제들을 제18차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토대에서 금번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5.29~6.1).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합의된 일정에 따라 회담을 마쳤

다. 공동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제20차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각 분야별 남북관계를 정례화·제도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해 나간다는 자세로 회담에 임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기초발언을 통해 ‘2·13 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 국방장관회담 개최, ▲ 개성공단 활성화, ▲ 철도 부분 연결, ▲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공동회의 개최,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강구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북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 남북간 합의사항은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 합동군사훈련, 국가보안법 등을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동 사안의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요 협의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그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한 단계 높은 평화’, ‘한 차원 넓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 공감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좋은 사례를 낳고, 냉전시대의 구태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공동의 이정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합동군사훈련, 국가보안법 등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제기하였다.

둘째, ‘2·13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 양측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우리측은 비핵화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토대라는 점에서 ‘2·13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북측은 관련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셋째, 쌀 차관 이행 지연 문제도 논의되었다. 북측은 쌀 차관 합의 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며,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쌀 차관 합의는 신의로써 이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차관 합의 이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쌀 차관 제공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제21차 장관급회담은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변적 정세 속에서 남북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쌀 차관 이행 문제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당면 현안에 대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상호 확인했으며,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협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포괄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 어쨌든 장관급회담을 통해 6자회담들에

서의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남북대화가 북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용한 채널임을 재확인하였다.

2008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틀과 방향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검토 기간이 소요된다. 6자회담의 '2·13 합의'와 후속 합의인 '10·3 합의'에 기반한 연내(2007년)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완전 신고 문제는 2008년으로 이행이 지연되고 말았다. 핵시설 불능화는 새해 상반기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나, 신고 문제는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사안이다. 북·미관계는 상호 신뢰를 문제삼아 2008년도 상반기까지 소강국면에 빠질 개연성도 있다. 6자회담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관급회담의 추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후 2007 정상회담의 대북경협 합의사항의 이행과, 상반기 중 쌀 비료 등 대북지원을 위한 남북회담 재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실천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은 한동안 유보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장관급회담의 재개의 본격적인 추진은 5월 경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의 신뢰회복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접근방식과 함께 장관급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 조 민 ·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원

다. 경제분야회담

남북간 경제분야 회담은 2007년에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상반기에는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4.18~22)가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3.14~15) 합의를 바탕으로 개최되었으며, ①열차시험 운행 실시, ②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사업 실시, ③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④임진강 수해방지 추진, ⑤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추진, ⑥자연재해 방지사업 추진, ⑦쌀 40만톤 차관방식 제공 등에 합의하였다.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2회(4.27~28, 5.13) 개최된 결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 연결구간에서 열차시험운행(5.17)이 실시되었다. 경공업·지하자원 사업 실시를 위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회가 2회(5.2~4, 5.22~23) 개최되었으며, ①경공업 원자재 1항차분(섬유 500톤) 제공, ②남측 기술지원단 북측 경공업 생산공장 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③검덕, 룡양, 대흥 광산의 지질도 등 광물 관련 자료 제공, ④남북 공동조사단 지하자원 현지조사 등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동 사업 이행을 위한 기구(남측: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지정하였으며, 이행기구간 실무협의 2회(6.7~8, 7.5~7) 개최를 통해, 남측은 북측에 2007년 중 미화 8,000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남측에 아연괴 및 마그네슘크링카 등 광산물과 지하자원 개발권 및 생산물 처분권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2007남북정상회담 개최이후 경제분야 회담은 매우 활발히 추진되었다.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11.14~16)에서도 경제분야와 연관된 ①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관련 5개항, ②조선협력단

지 건설 관련 5개항, ③개성공단 건설 관련 8개항, ④자원개발, 농업, 보건 의료 등 분야별 협력 관련 6개항, ⑤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2개항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관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10개항에 합의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운영 관련,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 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정기운행을 위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11.20~21)이 개최되어, 매일 1회씩 정례적 정기운행을 12월 11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화물열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①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체결, ②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③열차 운행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가 개최(12.1)되어, 경의선 문산—봉동(판문역)간 화물열차 개통과 관련하여 열차운행 횟수(매일 1회), 차량편성(총12량), 운행시간(오전 09:00 남측 도라산역 출발, 오후 14:00 북측 판문역 출발), 열차 취급절차 및 방법 등과 남북화물열차 개통식 북측 판문역 공동 개최에 합의하였다.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회의가 개최(11.28~29)된 결과, ①개성-평양간 고속도로의 공동 이용과 물자수송 활성화를 위한 개보수를 2008년중 착수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 안으로 완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②개보수 공사를 위한 공동 현지조사(남북 각 20명 내외)를

진행(12.11~27)하고, 현지조사보고서를 남북이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측은 현지조사를 위한 인원, 측량설비 및 기재 등을 지원하고 북측은 현지조사 관련 자료 및 각종 편의를 제공기로 하였으며, 향후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에 개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및 공동 이용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에 개최된 경제분야 남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의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12.4~6)되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경협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으며, 10조 19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철도·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력 관련, 도로협력분과위원회('08.2.12~13) 및 철도협력분과위원회('08.1.22~23)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협력 관련, 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 협의 관련, 조선 및 해운협력 분과위원회를 개최(12.25~28)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 해결을 위해서, 12월 17일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시작하고, 개성공단분과위원회를 개최(12.20~21)하기로 하였다.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 관련, 자원개발 협력 확대를 위해 지하자원개발 분과위원회를 구성, 2008년 1월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단천지역 광산 제3차 현지조사를 진행(12.20~26)하기로 하였다.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관련, 종자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12.21~25)하며, 북측 동해 일정한 수역에서의 수산협력사업을 우선 추

진하고,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12.14~15)하기로 하였다.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 관련, 합의한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약솜공장 건설 우선 추진과 환경보호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등을 2008년부터 추진하며, 보건의료·환경보호 분과위원회를 개최(12.20~21)하기로 하였다.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경험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2008년 4월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문제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12.14~15)와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12.20~21)가 개최되었다.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는 ①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②검역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정보 상호교환, 중요 검역소 검사·소독장비 현대화, 가축 예방·진단·치료약품 등을 추진하는 한편, ③동해 북측어장 입어 및 어로 등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④과수·채소·잠업·축산, 농업과 학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총 6개조 8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도병원 현대화 및 대기 오염측정시설 설치와 양묘장 조성 등에 대해 협의하고, 총4개조 10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회의 개최(12.20~21) 결과,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고 7개조에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①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연간 매일 07:00~22:00까지 상시통행 보장 일요일 통행시 48시간 전 통보, 남북간 출입업무·출입심사

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를 2008년 상반기 중 본격 운영), ②통신센터 건설,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 ③통관방식을 선별검사로 빠른 시일 안에 시행, ④1만 5천 여 명 규모의 북측 근로자 숙소 착공, ⑤2008년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⑥개성공단협력분과위 제2차 회의를 2008년 2월 중 개최 등이었다.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2.25~28) 결과, 남북 정상선언, 제1차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①조선분야에서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 ②해운분야에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와 통항질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2008년 1/4분기에 실시하며,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각기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차기 분과위원회는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12.28~29)가 개최된 결과, 6개조의 합의를 채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①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키기로 하였으며, ②해주항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공동 개발 및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③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 어로를 실시하고, ④한강하구 단계적 개발 및 이용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7 정상선언의 실천을 위해서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이미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분야의 분과위원

회 회의가 개최되었거나, 2008년 중에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의 신정부 출범에 따라 남한과 북한간 경제회담 개최의 속도와 폭이 다소간 조정될 것이다. 남북 경협을 둘러싼 실질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이지만, 남북경협의 확대 및 심화여부는 다른 분야의 남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상반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규모 경협사업에 대한 논의가 당분간 유보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미세한 부분에서의 남북합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회담은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이다. 기존 남북한간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현지 조사 및 기술 지원 관련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경협이 보다 견고한 바탕위에서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회담의 형태가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 김규륜 · 남북협력연구실장

라. 군사분야회담

2007년 남북군사회담은 이전 어느 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양적으로 풍성하게 개최되었다. 남북국방장관회담이 1차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3차례, 남북군사실무회담이 7차례 진행되었다. 그리고 국방장관회담 상위회담인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총리회담이 각각 1차례씩 열렸다. 이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회담인 남북군사실무회담 뿐만 아니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다루기 위한 남북장성급회담도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2000년에 각각 1번씩 열리고 중단되었던 남북국방장관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

고, 나아가 남북총리회담까지 열렸기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안보관련 회담이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교류협력분야에 비해 미진했던 군사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5.8~11)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예정일보다 1일 연장해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은 제13차 남북경추위에서 열차시험운행이 5월 17일로 결정됨에 따라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문제 협의를 위해 남측이 군사실무회담을 제안하자, 50여년 만에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역사적 사건인 만큼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할 것을 북측이 수정제의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성사되었다. 회담의제와 관련 남측은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문제를, 북측은 서해해상경계선 재설정문제·해주직항 허용문제·제주해협 통과문제 등을 각각 주장하였다. 군사보장 방식에서도 남측은 철도도로 통행의 상시군사보장을, 북측은 시험운행에 국한할 것을 고집하였다. 동 회담은 '5·17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0년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이후 처음으로 서해충돌방지 및 교류협력 군사보장, 제6차 남북장성급회담 7월 중 개최일정합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핵실험('06.10) 이후 UN안보리 경제제재와 2·13합의 이후 BDA문제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압력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소하고 국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남한의 식량·비료 지원 및 개성공단 활성화,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협력이 매우 긴급하였다. 따라서 남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자신들의 기존 의제를 반복 강조하면서, 경의선·동해선 시범사업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 것이다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7.24~26)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남북한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 및 경제협력·교류의 군사적 보장문제에 관해 중점 협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하였다. 서해충돌방지와 관련, 남측은 지난 50여년간 실질적 해상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온 북방한계선(NLL)을 존중·준수할 것과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측은 북방한계선이 ‘불법무법의 선’임을 강변하면서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협의를 주장하였다.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 남측은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동일면적의 수역에서 시범 설정·운영한 후 서해상에서 평화가 정착되는 데 따라 확대하지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북방한계선 이남에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관련, 남측은 쌍방이 기합의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과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및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를 조속히 타결할 것을 제의한 반면, 북측은 서해해상경계선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한 후, 논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쌍방의 입장만 재확인한 후 종결되었다.

북한이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 데에는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전술적 양보를 취한 데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최된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5.27~6.1, 서울)에서 대북 쌀지원을 받아내지 못하자, 다시 본연의 입장을 확고히 다진 것으로 보인다.

7년 만에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10.2~4)에서 남북한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에 합의하였다. 동 선언 제3항에서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을 위해 협력’할 것과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군사적 보장조치 등을 다루기 위한 남북국방

장관회담 개최(11월)가 천명되었다.

마찬가지로 7년 만에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11.27~29, 평양)에서 남북한은 '10·4선언'의 군사분야 이행방안과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7조 21개항의 합의를 채택하였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협상채널 마련,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및 평화보장,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이 있다. 특히 1992년 남북간 이미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구체적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하고, 10·4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실현과 서해해상 평화정착에 대한 양 군사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것과 전쟁시기 유해발굴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 그리고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남북관리구역의 3통문제 등 각종 협력사업이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12.5,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한은 8개항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12월 11일부터 남북한은 화물열차를 규정에 따라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의 혈맥 가운데 하나가 복원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2.12~14,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한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켰다. 이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3통제도 개선 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로

통행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07:00-22:00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통신은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가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관광지구에도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통관은 기존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여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이 이뤄졌다.

종합해 볼 때, 2007년 남북군사회담 관련 북한의 정책적 초점은 '실리 민족공조'에 기초하여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낮은 수준에서의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후에는 10·4선언 합의에 기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대표적 징후는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주로 담당했던 경제지원 의제를 군사적 긴장완화를 다뤘던 남북장성급회담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북한이 나왔다. 대신 북한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조치 구축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협상행태가 외형적 차원에서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질적 차원에서 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회담 횟수가 많아지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태도도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군사회담을 대남전략 틀 속에서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은 국방장관회담을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회담으로서, 장성급회담을 서해 해상경계선의 '정치적 이슈화'와 DMZ 선전수단 제거를 위해 활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북한은 남북군사회담에 적극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대미 관계개선에 나선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안정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

가운데 정권 교체된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 경협 활성화와 대북지원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지원성 군사회담에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군사문제를 북·미 양자대화 틀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긴장완화 중심의 남북 군사회담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한의 관심사항인 군사적 신뢰구축은 사실상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과 도전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긴장완화 중심의 군사회담 개최요구를 강하게 받게 될 경우, 서해 해상분계선 재설정문제를 거둬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불능화 다음단계인 북핵 폐기단계로 들어가게 될 때, 정전체제 및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기하며 남북 군축회담 개최와 한·미 갈등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허문영 · 평화기획연구실장

2. 남북교류협력

가. 경제분야

2007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가시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진전하였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10.2~4, 평양)이 이루어지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11.14~16, 서울)이 개최되었다. 또한 남북 양측은 정상회담 선언의 군사분야 이행방안과 제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11.27~29, 평양)을 개최하였다.

이런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부응해 2007년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남북교역의 내용면에서 상업적 거래는 증가하였고, 비상업적 거래는 감소하였다. 2007년 1~10월 중 전체 남북교역은 14억 3,958만 달러로 전년 동기 11억 6,932만 달러 대비 23%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반면, 비상업적 거래는 3억 3,36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였다.

<표 III-2> 거래 유형별 남북경협 추이

(단위: 100만 달러, %)

| | 상업적 거래 | | | | 비상업적 거래 (비중) | 합계 |
|-----------|--------|------|------|------------|-----------------|-------|
| | 일반교역 | 위탁가공 | 경협사업 | 소계(비중) | | |
| 2001 | 111 | 125 | 8 | 244 (61) | 159 (39) | 403 |
| 2002 | 171 | 171 | 13 | 355 (55) | 287 (45) | 642 |
| 2003 | 223 | 185 | 17 | 425 (59) | 299 (41) | 724 |
| 2004 | 171 | 176 | 90 | 437 (63) | 260 (37) | 697 |
| 2005 | 210 | 210 | 270 | 690 (65) | 366 (35) | 1,056 |
| 2006 | 304 | 252 | 372 | 928 (69) | 422 (31) | 1,350 |
| 2007.1~10 | 371 | 260 | 475 | 1,106 (77) | 334 (23) | 1,440 |

자료: 통일부

상업적 거래는 2007년 1~10월 중 11억 592만 달러로 전년 동기 7억 6,202만 달러 대비 3억 4,390만 달러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의 급증은 광산물,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일반교역(49%)과 섬유류 등 개성공단 반입품(48%)의 급증 및 의류 등 위탁가공교역(22%)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비상업적 거래의 감소는 대북지원 쌀의 반출가격이 국내시장가격(2006년 10.2만 톤 무상지원, 1,830 달러/톤)에서 국제시장가격(2007년 16.7만 톤 차관 지원, 380달러/톤)으로 변경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2007년 1~10월 중 남북교역의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업적 거래에서는 경협사업(개성공단, 경제협력, 경공업협력)이 4억 7,425만 달러로 일반교역 3억 7,125만 달러, 위탁가공교역 2억 6,037만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교역에서 경협사업의 비중은 33.2%, 일반교역은 25.6%, 위탁가공교역은 18.1%를 차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대북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13 합의에 따른 중유 공급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표 III-3> 2007년 1~10월 중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천달러, %)

| 구 분 | 상 업 적 거 래 | | | | | 비 상 업 적 거 래 | | | 합 계 |
|-----|-----------|---------|---------|--------|--------|-------------|------|--------|-----------|
| | 일반교역 | 위탁가공 | 개성공단 | 경제협력 | 경공업협력 | 대북지원 | 사회문화 | 중유제공 | |
| 교역액 | 371,250 | 260,369 | 344,675 | 97,471 | 32,154 | 300,524 | 766 | 32,375 | 1,439,584 |
| 구성비 | 25.6 | 18.1 | 23.7 | 6.8 | 2.7 | 20.8 | 0.1 | 2.2 | 100 |

자료: 통일부 보도자료

2004년부터 개성공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7년(1~10월)에 경제협력사업(자)로 138건을 승인하였다.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주)한국엘피가스와 (주)두담 등 2건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개성공단 협력사업을 위해 승인을 받았다. 2007년 10월말 현재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284건, 경제협력승인은 253건이다.

경제협력사업은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연결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각종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회담과 군사 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경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항간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

물을 시작하고,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완비하기로 하였다.

정상회담에서는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추진하기로 함과 동시에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경협사업에 합의하였다. 전반적인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과 이어 개최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2.4~6, 서울)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철도·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협력,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 해결, 자원개발 추진, 농업 및 수산협력 추진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분과위원회 개최 및 각종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200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 등의 여파로 2차단지 분양이 연기되는 등 사업추진에 다소간 차질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 핵의 연내 불능화가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한국토지공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연기한 1단계 2차단지(53만평)에 대한 분양공고(4.30)를 내고 분양을 완료하였다.

개성공단에는 2007년 11월 26일 현재 시범단지외 1차단지에 총64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 10개 기업이 공장을 건축 중에 있고, 26개 기업이 공장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47개 기업은 공장을 설계 중이다. 개성공단에는 20,634명의 북측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2007년 10월말 기준

으로 북측 근로자수는 19,502명(남측 847명), 이 중 생산직은 16,875명 이고 건설직은 2,627명이다.

2007년 1~10월까지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1억 4,612만 달러, 2005년 1월부터 2007년 10월말까지의 누적 생산액은 2억 3,476만 달러이다. 개성공단은 2007년 10월 사상 최초로 월간 생산액 2,091만 달러를 기록해 2,000만 달러 상회하였다.

2007년 1~10월까지의 전체 남북 교역액(14억 4천만 달러)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은 3억 4,468만 달러로 23.7%를 차지하였다. 개성공단 반입액은 8,205만 달러로 전체 반입액(6억 1,113만 달러)의 13.4%를 차지, 개성공단 반출액은 2억 6,262만 달러로 전체 반출액(8억 2,845만 달러)의 31.7%를 차지하였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비중)은 2004년 4,170만 달러(6.0)%, 2005년 1억 7,670만 달러(16.8%), 2006년 2억 9,880만 달러(22.1)%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2007년에는 열차시험운행과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정기운행이 성사되었다. 경추위 제13차 회의(4.18~22, 평양)에서 남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일괄 타결하고,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열차시험운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5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12월 11일부터 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관문역) 구간에서 개성공단 관련 화물수송을 위한 남북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되었다. 남북 화물열차는 12월 1일부터 매일 1회 정례적으로 운행하며 남측 도라산역에서 오전 9시 개성공단 원자재 등을 북측으로 운송하고, 북측 관문역에서는 14시 개성공단 생산품을 남측으로

운송한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6년의 관광객 감소에서 벗어나 다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금강산 관광객수는 234,446명으로 2005년 298,247명 대비 21.4%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10월말까지 총 278,425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해 2007년말까지는 34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예상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은 2007년 상반기 중 시험관광을 거쳐 내금강으로 관광코스가 확대되었다.

2008년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 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고,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경제 관련 실무접촉과 회담에서 기존의 경협사업의 조기 이행과 새로운 경협사업(철도 개보수, 고속도로 건설, 조선협력단지 건설, 해주경제특구 건설 및 해주항 개발 등)의 조기 착수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 관련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12~14, 판문점)됨으로써 이들 사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남북교역은 2008년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교역에서 상업적 거래는 크게 증가할 것이나 비상업적 거래는 2007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이다. 비상업적 거래에서는 특별히 증가의 요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적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유 제공은 예상할 수 있다.

상업적 거래의 증가는 경제협력사업의 확대에 기인할 것이다. 개성공단 1단계 본 공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상업적 거래의 증가는 주로 개성공단 관련 경제협력사업의 확대에 의해 유발될 것이다. 새롭게

추진하게 될 경협사업을 위한 물자의 반출 등도 상업적 거래의 확대 요인이 된다. 이런 경제협력사업의 확대와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호전에 따라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도 다소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2008년도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는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최수영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나. 사회·문화분야

2007 남북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이 모색되는 긍정적 여건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제도화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한 해로 평가될 수 있다. 2007년 11월말 현재의 기준으로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전년도의 26건에서 18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왕래인원은 대폭증가했다. 방북의 경우 2006년 4,324명에서 11,615명으로 대폭증가했으며, 방남인원도 2006년 293명에서 2007년 48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정치·군사적 요인의 영향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07년의 경우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남북합의 등 제도화의 수준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과거에 비해 북한측 인원의 방남이 증가했다. 우선 한달간 남측 전지훈련차 내려온 북측 세계청소년축구대표단(제주도, 32명)의 경우(3.20~)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달간 남한 장기체류와 아울러 제주도 전지훈련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의

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활성화가 예상되는 체육교류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07년 남북체육교류협회는 북한의 4.25체육단과 남북의 유소년축구팀이 남과 북을 서로 오가며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를 실시하기로 합의, 그 결과 상반기 2차례, 하반기 2차례의 상호교환경기가 실현되었으며, 2007년 제4차 교환경기(11.3~15)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외 북측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시범단(4.6~9, 48명),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북측 대표단(창원, 4.29~5.2, 60명) 방남 등이 있었으며, 북한 노동자 대표단의 방남은 직능별·부문별 교류협력의 확대 계기로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학술분야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 졌다. 특히 언어분야의 경우 2004년 12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합의한 이후 남북은 매년 4회씩 남북공동편찬회의를 진행하였고, 2007년 12월 제12차 남북공동편찬회의(12.8~9, 금강산)가 열렸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분기별로 남북공동 편찬회의를 개최하여 사전의 올림말을 공동 선정하는 등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사업은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회법’제정(4.27 공포)으로, 법적 근거에 기초한 사회교류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학술분야의 지속사업으로는 2001년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평양과 기대사업이 있으며, 2008년 4월 대학원 개교와 2014년 학부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외 ‘2007년 민족화해학술토론회’ 등 역사, 보건, 체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공동 학술회의들이 개최되었다.

2007년은 방랑시인 김삿갓(김병연, 1807~1863) 탄생 2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6·15민족문화인협회가 주최하는 “탄생 200

주년 기념김삿갓 문학의 밤”이 금강산에서 열렸다(12.8, 금강산 외금강 호텔). 동행사에는 고은시인의 기념강연과 젊은 시인들의 김삿갓 시낭독이 있었다. 김삿갓은 금강산 풍경에 관한 다수의 시를 남겼다.

종교분야의 경우 한국정교회는 북한 조선정교회와 평양 정백사원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여 남북정교회간의 교류사업 진행하였으며, 2007년 5월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북측 조선종교인협의회간에 종교교류 10주년 공동기념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종교분야의 지속사업에는 신계사 복원관련 교류협력사업이 있다. 불교 조계종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추진, 2004년 11월 대웅전 낙성식에 이어 2006년 11월 10개 전각을 복원하고, 2007년 남북공동 낙성식을 개최(10.13)하였다.

2007년은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제도화의 기반이 상당부분 정비된 해로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의 문화, 교육, 방송, 종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계획은 민족문화유산관련 교류협력의 추진, 스포츠교류 협정체결 및 상설 협의 창구 개설 등 남북간 체육교류의 정례화, 남북 예술인 공동창작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한은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통해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남북경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체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제도화의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이 도출되었으며, 동 선언문 6항은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백두산관광실시 및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참가’ 등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였다.

11월 서울에서는 남북한간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11.16)를 도출해 냈으며, 이를 통해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에 관한 후속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합의문의 4조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회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들을 담고 있다. 이중 주목할 부분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이다. 남북경협이 경추위를 중심으로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있었음에 비해 사회문화분야의 경우 이를 결여,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동 합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안정적 추진기반의 마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동 합의문은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 등 사회문화분야의 구체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의 진전을 전제로 상당부분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등 남한내의 추진기반의 확대와 아울러 2007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를 토대로 활발한 교류협력이 예상된다. 특히 2008 베

이징올림픽과 관련, 대표팀 구성 및 응원단 구성 등 체육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예상된다. 총리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학술, 보건, 의료 등 분야의 교류협력활성화가 예상되며, 이는 단순 교류를 넘어 점차 북한의 사회개발과 관련된 지향성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의 본격적 가동을 통해 당국간 상시적 채널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북한은 향후에도 실리추구적 자세를 견지하고, 대외 사조유입방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인적교류의 급격한 증대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8년에도 북한은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상징성이 큰 사회문화교류협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조한범 · 통일학술정보센터장

3. 인도주의 사안

가. 대북지원

2·13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진정됨으로써 대북지원을 둘러싼 논란도 다소 완화되었다. 특히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2006년 보다 크게 증대되었다. 2007년에도 2005년, 2006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을 통한 통합지원호소(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이후 WFP를 비롯한 평양주재 유엔기구 및 국제 NGO 요원들의 수가 축소되었으나, 지원 사업은 지속되어 왔다.

대북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2월 현재,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총 32,434만 달러(정부, 22,736만 달러: 2,159억 원, 민간차원 9,698만 달러: 920억 원)를 지원하였다. 2004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정부차원의 지원을 상회하였으나, 2006년도와 마찬가지로 2007년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민간지원분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양자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국내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III-4> 분야별 대북지원 개요

(단위: 만 불)

| 구분 | '95-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12 | 누계 |
|----------|--------|-------|-------|-------|--------|--------|--------|--------|--------|--------|--------|--------|---------|
| 일반 구호 | 23,680 | 4,329 | 2,891 | 565 | 1,435 | 6,067 | 4,174 | 6,157 | 10,472 | 4,346 | 11,672 | 14,792 | 90,580 |
| | 100% | 92% | 91% | 12% | 13% | 45% | 31% | 39% | 42% | 20% | 39% | 46% | 46% |
| 농업 복구 | 5 | 205 | 254 | 3,941 | 8,562 | 5,476 | 7,351 | 7,673 | 8,695 | 13,744 | 14,082 | 11,926 | 81,914 |
| | 0% | 4% | 8% | 84% | 75% | 40% | 54% | 49% | 35% | 65% | 47% | 37% | 41% |
| 보건 의료 | | 189 | 40 | 182 | 1,380 | 1,996 | 1,967 | 1,933 | 5,624 | 3,164 | 4,301 | 5,716 | 26,492 |
| | | 4% | 1% | 4% | 12% | 15% | 15% | 12% | 23% | 15% | 14% | 17% | 13% |
| 계 | 23,685 | 4,723 | 3,185 | 4,688 | 11,377 | 13,539 | 13,492 | 15,763 | 24,791 | 21,254 | 30,055 | 32,434 | 198,986 |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식량차관 제외

자료: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2007년 12월 현재)

1999년부터 시작된 대북비료지원은 2007년도에는 2006년도(35만 톤)에 비해 다소 감소된 규모인 30만 톤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0년 이래 지속되던 50만 톤 대북식량차관이 2006년에는 북한의 지원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2007년에는 재개되어 국내산 쌀 40만 톤이 지원되었다.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북한지역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차원의 긴급구호가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에 홍역과 성홍열 등 전염병이 확산되었으며,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와 직접지원 방식의 긴급구호를 추진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에서 구제역과 제선충 피해가 확대되자, 이를 위한 방역 물자가 지원되었다.

2007년에도 정부는 장기간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영유아들의 균형발달을 돕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성장동력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에 시작한 북한 영유아 및 여성의 건강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계보건기구(99억 원)와 유엔아동기금(29억 원)의 영유아 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국내민간단체를 통한 북한영유아사업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2006년과는 달리 2007년도에는 북한과 국내민간단체간 사업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북지원사업자의 승인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가 79개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원단체의 수가 61개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개별단체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2007년에는 못자리용 비닐지원, 산림녹화시범사업, 제약공장 원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정책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내 인도적 위기상황의 악화가 예상되었으나, 2·13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경통제 강화 및 장마당 통제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식량 가격 폭등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수해 등으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아사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평가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13 합의로 인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재개 되었고, 2007년 남북정상선언에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대한 북한에 대한 남북협력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이루

어짐에 따라, 2008년에는 분야별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 농업,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대북지원은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체제개선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공동행동규범을 확정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효율화를 위한 노력들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 국제기구, 국내민간단체 간의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각 분야 협력관련 남북 실무부처 간 협의가 정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에는 대북지원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기준 및 절차들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이금순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나. 이산가족문제

2007년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되고 대면상봉 2회, 화상상봉 3회, 금강산 면회사무소 개소식 등이 진행되었다. 2007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전면 중단되었던 이산가족 상봉·교류가 재개된 것은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2.27~3.2)을 계기로 해서이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은 제5차 화상상봉과 제15차 대면상봉,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추진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3.9, 금강산),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등 이산가족문제 관련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올 한 해

이산가족 상봉·교류 사업을 시작 하였다.

제5차 화상상봉(3.27~29)은 2006년 8월 개최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북측의 상봉 중단 선언으로 무기한 연기되어 제4차 상봉(2006.2.27~28) 이후 13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총 120가족(819명)이 상봉하였다. 제5차 화상상봉 후 개최된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4.10~13)에서는 8·15·추석 계기 남북 각 40가족씩 화상상봉 2차례, 추석 계기 남북 각 100명씩 대면상봉, 남북 각 20가족(기상봉가족)씩 영상편지 시범교환,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국군포로·납북자 생사·주소확인문제 협의·해결 등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제15차 대면상봉(5.9~14) 행사를 통해서 총 198가족(910명)이 만났으며 한 건의 전후 납북자 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2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제6차 화상상봉(8.13~14)을 통해서 총 80가족(550명)이 만났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 영상편지 교환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한 2007 남북 정상회담(10.2~4) 직후 개최된 제16차 대면상봉(10.17~22) 행사에서는 총 190가족(831명)이 만났다. 이전의 행사들에서는 두 세 건의 상봉사례가 있었으나 제16차 상봉행사에서는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상봉이 한 건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실패는 당시 북한에 극심한 수해가 발생하여 상봉자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해결 의지가 소극적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은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북측은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제16차 대면상봉에서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을 제외함으로써 이 문제와 관련한 소극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6차 대면상봉에 이어 진행된 제7차 화상상봉(11.14~15)에서는 총 78가족(503명)이 만났다. 이로써 지난 한 해 동안 두 차례의 대면상봉(388가족/1,741명)과 세 차례의 화상상봉(278가족/1,872명)을 통해 총 666가족(3,613명)이 만났으며 9,121명이 생사 확인을 하였다.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11.28~30)에서 남과 북은 상봉 확대, 영상편지 교환, 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계속 해결, 금강산 면회소 쌍방사무소 준공식(12.7) 참가, 금강산 면회소 준공(2008.3.예정) 후 제10차 남북 적십자회담(금강산)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상봉 확대와 관련해서는 연간 400명 정도씩 대면상봉(겨울철 제외) 진행, 2008년 6·15를 계기로 이미 화상상봉이 성사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북 각 100명씩 이산가족 특별상봉(금강산) 진행, 분기별로 각 40가족 정도씩 1년에 160가족 화상상봉 실시, 대면상봉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동반가족 1명 추가 등에 합의하였다. 영상편지 교환과 관련해서는 2008년 새해에 남북 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시범교환하며 분기마다 남북의 기상봉자 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간 상봉 규모 및 분기별 진행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미 화상상봉을 한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6·15 특별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교류가 진행된 이래 처음으로 재상봉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기상봉자의 분기별 영상편지 교환 합의도 재상봉 실현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남측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대면상봉을 위해 방북할 때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 1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도 고령이산가족과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의 편의를 한층 도모한 것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새로운 상봉방식인 영상편지 분기별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상봉 방식의 다양화 및 인원 규모 확대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루었다. 올해 추진된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금강산 면회사무소 개소이다.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금강산 면회소 건설 공사가 지난 3월에 재개되었으며 9개월여 만에 남북 면회사무소가 준공·개소된 것이다. 남북은 면회사무소 개소에 따라 각 대표단을 상주시켜 면회소 준공과 함께 진행될 면회 운영 등 이산가족 상봉·교류 관련 사안들을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되었다. 면회사무소 상주 직원들은 금강산 상봉행사 지원, 상봉 확대 및 상시 상봉 등 이산가족 상봉·교류 관련 남북간 협의 업무 담당, 광범위한 인도주의 협력 분야의 남북간 연락 및 협의 창구로 기능하게 된다.

제9차 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대로라면 2008년 1/4분기에 금강산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의 상봉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2008년 한 해에 걸쳐 대면상봉(400명), 화상상봉(160가족), 6·15특별상봉(재상봉/100명), 영상편지 교환(120가족) 등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08년은 연간 최대 규모의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08년 초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면 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와 상봉·교류 인원 규모 확대에 있어서도 보다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교류로 인한 체제동요를 우려하는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영상편지 교환과 화상상봉은 대면상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봉방식일 수 있으므로 영상편지 교환과 화상상봉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생사·주소확인도 상봉에 비해 북측의

부담이 적은 사업이므로 관련 행정여건 개선지원을 통한 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나 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해결은 전망이 불투명하다. 2006년 남북은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문제를 남북 당국간에 본격 공론화, 의제화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2007년 진행된 장관급회담, 정상회담, 총리회담 등 남북 당국회담에서 국군포로·납북자문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으며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에서도 북한은 이 문제를 종래와 같이 일반 이산가족문제의 틀 안에서 풀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에 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산가족문제는 인권 및 인도주의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 입장,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산가족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추진에 따라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 및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보수성향의 신정부가 참여정부와는 달리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제9차 남북 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임순희 ·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2007년에도 중국 및 동남아 등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월 16일 자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0,006명으로 만 명 선을 넘게 되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0월 현재 1,990명으로 2006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으

며, 전체 입국자의 규모는 11,696명에 이르고 있다. 1999년 148명으로 3자리수를 기록한 이후, 2004년 1,89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1,383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는 2,019명으로 다시 2004년의 입국규모를 상회하게 되었다.

입국자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7년 10월 현재 전체입국자중 여성비율은 2006년 75%보다 다소 높은 7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입국자 비율은 30대(36%)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도와 비교하여 2007년에는 40대의 입국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도 2006년과 큰 변화 없이 태국경찰이 북한이탈주민을 체포하여 태국이민국 수용소에 송치하고 이후 조사절차를 거쳐 희망에 따라 한국 및 미국 등 제3국 입국이 허용하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국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일부가 출국승인 지연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를 계기로 집단 단식 농성(연합뉴스, 4.25)을 벌이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국내입국이후 본인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992년 탈북하여 2004년 입국한 김천일이 ‘중국인’으로 분류되어 강제추방 되었다가, 중국정부가 중국인으로 볼 수 없다고 돌려보내지자 ‘무국적자’로 정부에게 보호결정 재심사기회를 부여하고 관련법을 개선하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8.22)하였다.

2007년도에도 2006년에 이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탈북난민 수용이 구체화되어 태국체류 중 탈북자 입국 허용 등 12월 현재 총 37명에게 북한인권법에 따른 난민지위가 허용되었으며 대규모 집단수용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2007년도에도 벨기에가 2명의 북한이탈주

민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정부가 한국국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치적 망명조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자, 미국으로의 불법입국 시도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이 영국으로 이주하여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단위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이동하여, 한국국적을 속이고 북한주민으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등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장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2007년도에는 국경수비대 20명의 집단탈북 보도(데일리NK, 2.4)가 있었으며, 탈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경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경수비대 등 조직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탈북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이 국경수비대 등이 뇌물을 받고 탈북을 방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지역 배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인권단체들이 탈북자인권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중국인권문제로 거론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올림픽기간 동안 북한주민들의 중국여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상반기에 중국체류중인 탈북자에 대한 단속 및 강제송환이 강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탈북자 송환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강제송환 대신 내부적으로 탈북자 및 관련단체들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집단행동의 발생

을 철저히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및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직계가족들의 입국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국내입국규모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이미 공개된 태국 등 입국경로가 현지국의 부담으로 통제될 경우 동남아 다른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영국 등 제3국으로의 이주와 관련 해당국과 우리정부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수의 난민지위 부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재입국 문제 등 상당한 문제점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2007년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탈북이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하지 않도록 명시함에 따라, 국내입국 이후에 관련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적만 부여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이금순 ·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라. 북한인권

2007년도 북한인권문제는 유엔, 개별국가, NGO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엔인권이사회 운영 규정 논의, 2·13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단계 이행이 구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론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2006년에 이어 2007년

에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가 1년 연장되었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임명된 비릿 문타본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2007년에도 북한당국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방문과 공식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제네바북한대표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신(6.8)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표상이므로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서신(6.18)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유엔인권이사회(2.7), 유엔 총회(8.15)에 북한인권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등 국내 인권·평화단체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부 주장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등 견해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3.17)하였다.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1.22)하였는데,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를 초청하여 12월 6일 대화를 하였지만 북한은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협력 제안에 대하여 북한인권결의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주제별 유엔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북한당국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1.25)은 초법적 및 자의적 처형 문제, 아동매매 특별보고관(3.15), 여성특별보고관(3.19)은 여성 인신매매, 고문특별보고관(3.20)은 고문 및 잔혹한 처벌, 식량특별보고관(5.18)은 국제기국에 의한 긴급식량 지원 제한 결정, 곡물 사적 거래 금지 문제, 인신매매특별

보고관(5.30)은 북한여성 강제송환, 인신매매 사례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적대세력의 음모의 산물로서 북한인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5년, 2006년에 이어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제62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11.20)되었는데,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통과되었다. 한국정부는 2006년 최초로 찬성하였지만 2007년도에는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박석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11.20)는 인권결의안이 인권결의안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며 문제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이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 문답형식(11.22)으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악선전문서”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인권결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유엔 차원과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지속되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연례각국 인권보고서(3.5), 인권·민주주의지원보고서 2006(4.5), 연례인신매매보고서(6.12), 연례종교자유보고서(5.2)를 연례적으로 발표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08 회계연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SF)을 정규예산안으로서는 처음으로 2백만 달러를 책정하였다. 그리고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법 제107조 d항에 따라 1년 동안의 활동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5월)하였다. 그리고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가 주최한 북한

인권 청문회(3.1)에서 북미간 인권대화를 촉구하였다. 그는 영국 런던의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연설(1.24)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으면 북한과 안보, 경제 부문 관계도 진전시키지 않는 ‘헬싱키 협약’ 방식의 대북 접근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힐 차관보는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최 한반도문제 토론회 오찬강연(3.26)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였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1.10)에서 북한노동자의 노동의 권리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 보도(1.30)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정부는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제기돼온 체코 공장취업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및 임금착취 논란과 관련,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을 중단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2007년에도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노동자의 노동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 안명철(38)씨와 신동혁(24)씨가 19일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수와 영국·북한의회그룹 의원들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6.19)하였다.

북한인권 관련 행사를 통하여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금년에도 워싱턴에서 개최(4.23~28)되었다. 또한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프리덤하우스는 ‘6자 회담과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개최(5.21~22)하였다. 그리고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현재 36개국 1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제의원연합체인데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4차 총회를 개최(8.28~30)했다. 특히 일본은 ‘납치문제 기 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의 납치문제 등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국제회의 등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개최(12.10~16)하였다.

국내적으로 보수성향의 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탈북자 단체 20개가 연대하는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창립(4.10)되었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등 485명의 각계인사들에 의해 보수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 산하조직으로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5.28)되었다.

비정부기구들도 연례보고서, 특별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고문, 구금 시설 등 특정사안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보고서들의 발간이 확대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World Report 2007(1.11), 국경없는기자회의 ‘2007 세계 언론자유 연례보고서’(2.1),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고문의 공화국, 북한’(3.19), 프리덤하우스는 연례보고서(5.10), 국제인권전문가 데이비드 호크의 ‘잔인함의 집결’(Concentration of Inhumanity)(5.21), 국제사면위원회(AI)의 ‘2007년 연례인권보고서’(5.23),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의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6.20),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통계백서 2007’(6.29), Brookings Institute의 Human Rights and the North Korea Refugee Crisis(10.25), 미북한인권위원회의 Legal Strategi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11.28) 등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특히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인권문제가 상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보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한국의 민간 대북 방송인 열린북한방송에 2만5천 달러(2.22)를 지

원하였다.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거부하는 태도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에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북한이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들이 상호 협조 아래 북한당국과 북한인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10·3 합의에 따라 북한 핵 신고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상응하는 조치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고 적성국교역법에서 제외되는 등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북·미간 직접인권대화 등 북한인권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 공개처형, 해외 북한노동자의 노동권리 등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목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문보고서 등에서 보듯이 구체적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보고서들의 발간이 활성화될 것이다. 아울러 보수성향의 국내외 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의 유엔안보리 상정,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주장들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를 원용한 북한인권 해결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 김수암 ·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부록: 2007년 주요 사건일지

남북관계 일지

- 01.11 북한, 장춘(중국)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입장 제의
- 01.25 남북장관급회담개최를 위한 실무접촉(개성)
- 01.28 장춘(중국)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입장
- 01.30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총회 개최
- 02.13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개성)
- 02.27~03.0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 03.08 북한, 대한적십자사에 비료 30만톤 지원 요청
- 03.09~03.10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제6차 적십자실무접촉(금강산)
- 03.14~03.1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개성)
- 03.20~04.20 북한 세계청소년축구대표단 방남 전지훈련
- 03.21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
- 03.27 대북지원 비료 30만톤 전달 개시
- 03.27~03.29 제5차 화상상봉 개최
- 03.30 구제역 방지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개성)
- 04.06~04.09 북한 장웅 IOC위원 및 태권도 시범단 방남
- 04.10 안중근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
- 04.10~04.13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금강산)
- 04.18~04.2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회의 개최(평양)
- 04.2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수정·보충합의서, 남북한 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 발효
- 04.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 04.27~04.28 제13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개성)
- 04.29~05.01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개최(경남 창원)
- 04.30 개성공단사업 1단계 2차단지(53만평) 분양완료
- 05.02~05.04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실무협의
- 05.08 산림 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개성)
- 05.08~05.11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 05.09~05.14 제15차 대면상봉 실시
- 05.13~05.14 제2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05.17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 운행
- 05.21 인민군 해군사령부, 우리군의 영해침범 주장
- 05.22~05.23 제3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실무협의

| | |
|-------------|--|
| 05.29~06.01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 06.01 | 내금강 관광 개시 |
| 06.07~06.08 | 제1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실무협의(개성) |
| 06.08 |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
| 06.12~06.13 |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개성) |
| 06.14~06.17 | 6·15민족통일대축전 개최(평양) |
| 06.21 | 남북송전선로 연결 |
| 06.26 | 대북 식량(쌀)차관 40만톤 전달 개시 |
| 06.29~06.30 |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개성) |
| 07.05~07.07 |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실무협의(개성) |
| 07.10 |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
| 07.12 | 2·13합의 이행에 따른 대북중유 5만톤 지원 개시 |
| 07.16 |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
| 07.24~07.26 |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
| 07.28~08.18 | 제1차 북한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
| 08.02~08.03 |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1차 남북특사접촉(평양) |
| 08.04~08.05 |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2차 남북특사접촉(평양) |
| 08.07~08.11 | 제1차 기술지원단 북한측 경공업 현장 방문 |
| 08.08 | 남북정상회담(8.28-8.30) 평양개최 남북 동시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건 심의의결 |
| 08.13~08.14 | 제6차 화상상봉 실시 |
| 08.14 |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발표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및 분야별 제1차 실무접촉(개성) |
| 08.16 |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및 분야별 제2차 실무접촉(개성) |
| 08.18 | 북한 수해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연기 합의 |
| 08.20~08.31 |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
| 08.23~08.25 | 수해관련 대북 긴급구호물자 지원 |
| 09.10 | 대북 수해복구 자재·장비지원 개시 |
| 09.18 | 남북정상회담 제1차 선발대 방북 |
| 09.27~10.01 | 남북정상회담 제2차 선발대 방북 |
| 10.02~10.04 |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2007남북정상선언' 발표 |
| 10.06 | 대북 식량차관 제1차 분배현장 확인(개성, 고성) |
| 10.17~10.22 | 제16차 대면상봉 실시(금강산) |
| 10.20~11.07 | 제2차 북한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
| 10.26 |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접촉(개성) |
| 11.05 | 남북농업협력 제1차 실무접촉(개성) |
| 11.09 | 남북총리회담 제2차 실무접촉(개성) |
| 11.11 | 남북총리회담 제3차 실무접촉(개성) |
| 11.12 |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

- 11.14~11.15 제1차 총리회담(서울)
- 11.14~11.15 제7차 화상상봉 실시
- 11.20~11.2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
-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 11.24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 11.27~11.29 제2차 국방장관회담(평양)
- 11.27-12.1 백두산 관광 사전답사
- 남북농업협력사업(양돈) 현장답사
- 11.28~11.29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개성)
- 11.28~11.30 제9차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금강산)
- 11.29~12.1 김양건 통전부장 방남
- 12.0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개성)
- 12.04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예비접촉(서울)
- 12.04~12.0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서울)
- 12.04-12.08 제1차 기술지원단 북측 경공업 현장방문
- 12.05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통일각)
- 육로이용 개성관광 시작
- 12.07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남북사무소 준공
- 12.10 도라산물류센터 준공
- 12.11 문산-봉동간 남북화물열차 정례운행 개시
- 12.11~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문제 협력관련 2차 현지조사 시행
- 12.11~12.13 개성-평양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1차 현지조사
- 12.12~12.14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집)
- 12.12-12.18 개성-신의주주간 철도 개보수 제1차 현지조사
- 12.14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발효
- 12.14~12.15 남북농업수산물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개성)
- 12.16 6자회담 대북에너지 설비·자재 긴급제공 우선 1차분(철강류) 출항
- 12.17~12.18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개성)
- 12.18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 12.20~12.21 개성공단건설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개성)
-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개성)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개성)
- 12.20~12.26 단천지역 광산 제3차 현지조사 진행
- 12.21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청사 준공(개성)
- 12.21~12.25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위한 종자생산, 가공시설 및 유전자원저장고 건설위한 현지조사(평양, 은율)
- 12.25 금강산관광지구 관리위원회 설치관련 실무접촉(개성)

- 12.25~12.28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부산)
 12.28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실무
 접촉(개성)
 12.28~12.29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개성)

동북아정세 일지

- 01.09 일본,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
 01.11 중국, 2007년 인공위성요격용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01.14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및 공동성명 발표(필리핀 세부)
 01.15~01.19 한·미 FTA 제6차 협상 개최(서울)
 01.19 ‘한·미 군사동맹구조 연합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 서명
 01.22~01.23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
 01.25 한·일 외무장관 전화회담
 01.25~01.27 외교통상부장관 방중
 02.07~02.08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제11차회의 개최(서울)
 02.08~02.13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베이징)-2·13합의 도출
 02.11~02.14 한·미 FTA 제7차 협상 개최(워싱턴)
 02.19 북 외무성 대변인, 조총련 탄압 비난 성명 발표
 02.23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워싱턴)
 02.25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일본)
 03.05~03.06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제1차회의 개최(뉴욕)
 03.07~03.08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제1차 개최(하노이)
 03.08~03.12 한·미 FTA 제8차 협상 개최(서울)
 03.13 일본·호주, ‘일·호 안보협력 공동선언’ 채택
 03.19~03.22 제6차 6자회담 제1단계 회의 개최(베이징)
 03.20 국방부, 미군용산기지 2012년까지 평택으로 이전 합의 발표
 03.22~03.23 한·중 FTA관한 산·관·학 공동연구 1차회의 개최
 03.25~03.31 한미연합전시증원 연습 및 독수리훈련 실시
 03.26~04.02 한·미 FTA 고위급협상 개최(서울)
 03.27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
 03.31 한·일 외무장관회담 개최(제주도)
 04.10~04.13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한
 04.11 중·일 정상회담 개최(도쿄)
 04.16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제12차회의 개최(워싱턴)
 04.23~04.26 한·중 국방장관회의 개최(중국)
 05.05 한·일 외무장관 회담 개최(이집트 샤름 엘-셰이크)
 05.15 북 외무성 대변인, BDA관련 입장 표명

| | |
|-------------|--|
| 05.15 | 중국 근해에서 한국 ‘골든로즈’호 중국 선박과 충돌 16명 사망 |
| 05.16 | 제3차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베이징) |
| 05.21 | 미 국무부, 북한 ‘테러방지 노력 비협력국’ 지정 |
| 05.21~05.22 | 프리덤하우스 북한인권 국제포럼 개최 |
| 05.22~05.23 | 제2차 중·미 경제전략대화 개최(워싱턴) |
| 06.01 | 아시아안보회의 개최(싱가포르) |
| 06.03 | G8정상회담 개최 |
| 06.03 | 한·일·중 외교장관 제주도 회담 |
| 06.05 | 한·러 외무장관회담 개최(서울) |
| | 부시 미대통령, 북한 ‘최악의 독재국가’로 지칭 |
| 06.08 |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제13차회의 개최(서울) |
| 06.11 | 제14차 한중 무역실무회담 개최 |
| 06.16~06.18 | 한·러 철도운영자회의 개최(모스크바) |
| 06.19 | 미·베트남 정상회담 개최(워싱턴) |
| 06.20~06.21 | 미·중, 제4차 고위급회담 개최(워싱턴) |
| 06.21 | 한·일 외무장관 전화회담 |
| 06.26~06.29 | IAEA실무대표단 방북 |
| 06.28~08.03 | 한·러 연해주 발해유적 공동 발굴조사 |
| 06.29 | 한·미 FTA 협상타결 |
| 07.03 | 중국 양제츠 외교부 부장 방북 |
| 07.03~07.04 | 한·중 FTA관한 산·관·학 공동연구 2차회의 개최 |
| 07.17~07.20 | 일·인도 고위급회담 개최(워싱턴) |
| 07.18~07.20 | 제6차 6차회담 수석대표회의 개최(베이징) |
| 07.24 | 한·러 변호사회 교류협력협정 체결 |
| | VWP가입관련 한·미기술협의회 1차회의 개최(서울) |
| 07.27 |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제14차회의 개최(호놀룰루) |
| 07.29 |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참패 |
| 08.02 | 한·중 외교장관회의 개최(ARF계기) |
| 08.07~08.08 |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회의 개최(판문점) |
| 08.09 | 한·일 외교장관 전화회담 |
| 08.09~08.17 | ‘평화사명 2007’ 합동군사훈련 실시(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
| 08.16~08.17 | 제2차 비핵화 실무그룹회의 개최(심양) |
| 08.20~08.21 | 동북아 평화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모스크바) |
| 08.20~08.31 | 을지포커스렌즈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
| 08.30 | 중·일 국방장관 회담 |
| 08.31 | 한·러 외무장관회담 개최(모스크바) |
| 9월~11월 |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확대사업 실시 |
| 09.01~09.02 |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회의 개최(제네바) |

- 09.04~09.07 '말리바 2007' 해상합동군사훈련 실시(미국, 일본, 호주, 인도, 싱가포르)
- 09.05~09.06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회의 개최(울란바토르)
- 09.06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시드니, APEC 계기)
한·러 통상장관 회담 개최(시드니, APEC 계기)
이스라엘 공군기 시리아 핵시설 폭격
- 09.07 한·중 정상회담 개최(시드니, APEC 계기)
- 09.08 한·중 외교장관회담(시드니, APEC 계기)
- 09.09 한·러 정상회담 개최(시드니, APEC 계기)
- 09.10~09.11 한·러 군사기술협력 실무회의 개최(모스크바)
- 09.11~09.15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
- 09.12 일본, 아베총리 사임
- 09.13 일본,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달 탐사위성 '가쿠야' 발사 성공
- 09.14 제3차 한·러 경험위원회 합동회의 개최(모스크바)
- 09.25 일본, 후쿠다 야스오 신임 총리 취임
- 09.28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UN총회 계기)
한·일정상 전화회담
- 09.27~09.30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북경)
- 10.02 제62차 유엔총회 북한외무성 최수현 부상 기조연설
- 10.03 9·19공동성명 이행 제2단계 조치 채택
6자회담 합의문-(북: 연말까지 북한 핵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미: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
- 10.11 한·미 제2차 차관급전략 대화개최(워싱턴)
- 10.12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게이즈 국방장관 방러(모스크바)
- 10.16 미의회, 티베트 달라이 라마 초청 황금메달 수여
러시아·이란, 정상회담 개최(테헤란)
- 10.19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제15차회의 개최(워싱턴)
- 10.24 중국, 달 탐사위성인 '창어 1호' 발사 성공
- 10.24~10.26 한·중 FTA관한 산·관·학 공동연구 3차회의 개최
- 10.28 제4회 중국·아세안 박람회 개최(광시 장족자치구)
- 10.29~10.30 제3차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개최(판문점)
- 11.01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 개최
- 11.01 북핵불능화 실무팀 방북
- 11.05 미 게이즈 국방장관 방문, 미·중 군사합작인 개설 합의
- 11.06 제4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11.06~11.07 VWP가입관련 한·미기술협의회 2차회의 개최(서울)
- 11.07 제39차 SCM개최(서울)
- 11.10 남·북·중 제3차 경제, 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3자간 전문가회의 개최(선양)

| | |
|-------------|--|
| 11.12 |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개최(모스크바) |
| 11.16 | 미·일 정상회담 개최 |
| 11.18 | 한·중 정상회담 개최(싱가포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
| 11.18~11.22 | 제11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3차 동아시아정상회담(싱가포르) |
| 11.20 | 한·일 정상회담 개최(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계기) 제62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
| 11.21 | 중·인도 총리회담(싱가포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
| 11.21~11.24 | 중국, 미 해군소속 군함 홍콩 정박 거부 |
| 11.24 | 호주, 자유당·국민당 집권연합 하원선거에서 노동당에 패배 |
| 11.26 | 중국, 양체스 외교부장 방미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 |
| 11.27 | 북핵 불능화 실사단, 영변 핵시설 현장 시찰 |
| 11.28 | 중국 '선전호' 도쿄만 요코스카 군항에 입항 |
| 11.30 | 호주 케빈 러드 노동당 당수, 이라크 주둔 호주군 철군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 계획 발표 |
| 12.01 | 일·중 고위급 경제대회 개최 |
| | 미국, 부시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친서 전달 |
| 12.02 |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총선 실시 |
| 12.03~12.04 | 제9차 미·중 고위급 국방회담 개최(워싱턴) |
| 12.04~12.06 | 제14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 12.06 | 북한, 부시대통령 친서전달 발표 |
| 12.07 | NATO 26개국, 외무장관 회의 개최(브뤼셀) |
| 12.09 | 베트남, 중국의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강화에 대해 하노이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 전개 |
| 12.10~12.11 | 중국 원자바오 총리 초청으로 한덕수 총리 방중 |
| 12.10~12.16 |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북한인권주간 행사 개최 |
| 12.12~12.13 | 제3차 중·미 경제전략대화(베이징) |
| 12.12~12.14 | 한·러경제공동위원회 개최(모스크바) |
| 12.17~12.19 |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방북 |
| 12.19 | 한국 대통령선거 실시, 이명박 후보 당선 |
| 12.27~12.30 | 일본 후쿠다총리, 방중 |

북한사건 일지

| | |
|-------|--|
| 01.01 | 2007년도 당보·군보·청년보 신년공동사설 발표 |
| 01.03 | 백남준 외무상 사망 내각 전력공업상에 박남철(전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임명 |

- 01.11 평양 법률사무소 개설
- 01.16~01.18 북·미 베를린 접촉
- 01.17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발표
- 01.17~01.18 북·미 양자협의 개최(베를린)
- 01.18 수하닌, 주북러시아대사 취임
- 01.19 북·미 양자협의관련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 01.25 외무성 대변인, UNDP자금유용 문제관련 비난
- 02.05 김정일 생일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선군혁명선구자대회 개최(4.25문화회관)
- 02.08 김정일 선군협력 영도업적 중앙연구토론회 개최
- 02.15 김정일 65회 생일(2/16)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02.21 최광 사망 10주기 중앙추모회 개최
- 02.22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혈주단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개최
- 02.27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 재개
- 02.28 전국 법무일꾼대회 개최(평양)
- 03.05 김정일 위원장, 중국 대사관 방문
- 03.07 EU트로이카 대표단 방북
- 03.08 제97회 3·8국제부녀절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
- 03.17 검열위원장 박용석 사망
- 03.23 북·러 무역, 경제,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개최(모스크바)
- 03.27 북·중, 북한인민군대표단 중국 총참모장 량광리에 면담(베이징)
- 03.28~03.29 북·EU 기업간 워크숍 개최(토리노)
- 04.02~04.05 독일 나우만재단 세미나 개최(평양)
- 04.08~04.11 미국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 방북(6.25전쟁 미군 6구 유해 송환)
- 04.10 북·중 평양 합영사료 공장 생산 시작
- 04.11 최고인민회의의 11기 5차회의 개최-김정일 내각총리,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 04.14 김일성 생일 95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04.14~05.20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개막(5.1경기장)
- 04.18 내각전원회의의 확대회의 개최
- 04.19~05.15 김정일 외무성 부상, 아시아 순방(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이란)
- 04.23 시리아 외무성 대표단, 김영남과 담화
- 04.24 이탈리아 주재 대사 한대성 임명
북 외무성 대표단, 인도네시아 대통령 접견
- 04.25 인민군 창건 75돌 기념행사-김정일 위원장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및 열병식 참석
- 04.26 북·중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 미얀마와 외교관계 재개
- 04.30 북·멕시코노동당,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 05.03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34차 전원회의 개최(평양)
- 05.03~05.07 제22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3대혁명전시관)
- 05.04 군민대단결로 백승을 떨치자' 제하 노동신문·조선인민군 공동
사설 발표
- 05.07~05.26 외무성 대표단(단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중남미 방문(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니카라과)
- 05.09 삼수발전소 준공식
- 05.10 평양수예연구소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 개최
- 05.10~05.15 제7차 5.21건축축전 개최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 방북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 방중
- 05.14~05.17 제10차 평양북국제상품 전시회 개최(3대혁명전시관)
시리아 디마스크종합대-김일성종합대, '친선및 과학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 05.16 리카라과와 1990년 단절되었던 공식 외교관계 복원
- 05.18 신임 외무상 박의춘 임명
- 05.23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원회 제11차회의
개최 및 '북·러 임업부문 의정서' 체결(평양)
- 05.25~05.26 조총련 제21차 전체대회 개최(도쿄)
- 05.26~05.31 북한 민주여성 대표단 방중
- 05.27~06.02 양형섭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방문
- 05.30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발효
- 05.31 세계 금연의날 행사 개최(평양)
국제아동절 57돌 행사 개최(평양)
- 06.02 양골라 군사대표단 방북
- 06.04 북최고인민회의대표단-베트남인민회의대표단 회담(만수대의사당)
- 06.05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행사 개최(평양)
북·중, 제46차 국경하천운항협조위원회 개최(평양) 및 '국경하
천운항협조합의서' 체결
- 06.05~06.09 중국 공산당 대표단(단장: 루하오 간수성위원회 서기) 방북
- 06.05~06.10 북한 노동당 대표단(단장: 김진하 평양시당 비서) 방중
- 06.06 소년단 창립 61주년 기념 행사 개최(평양)
북 내각,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시행규정' 채택
- 06.12 제33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 체육경기 개막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대표단 방북
- 06.13 조총련 상임이사회, 제29차 정기총회 개최(도쿄)
- 06.13~06.14 상표·공업도안·원산지명예에 관한 민족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06.15 BDA문제 해결
- 06.16 이인모 사망
원자력총국장, IAEA실무대표단 초청
- 06.19 러시아 극동상업은행 조선무역은행에 BDA자금 입금
- 06.19~06.21 남아공 정부대표단 방북, '체육 및 오락분야에서의 쌍무적 협조에 관한 양해문' 체결
필리핀 외무상 방북
- 06.21~06.22 미, 크리스토퍼 힐차관보 방북
- 06.23~06.26 유럽의회 대표단(단장: 후베르트 피르커 의원)방북
- 06.25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 06.27~07.02 제10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
- 07.06 외무성 대변인, 영변핵시설 가동중단 의사표명
- 07.08 김일성사망 13주기 추모 금수상기념궁전 참배(당 및 국가간부)
- 07.09 지기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사망
- 07.10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58차 전원회의 개최-위원장 김병팔 임명
- 07.13 북한 북·미군사회담 개최 제의
이집트 오라스콤 건설회사,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현대화 계약 체결
- 07.15 북외무성, 영변 핵시설 완전 폐쇄 성명발표
- 07.16 몬테네그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07.19 북한 6·25전쟁 남침 부인
- 07.21 김영남위원장 몽골 방문 및 '보건 및 의학과학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 '해상운수에 관한협정' 체결
- 07.23~07.24 국제감자과학토론회 개최
- 07.24~07.31 김영남 상임위원장, 아프리카 3개국 순방(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 07.27 정전협정 체결 54주년 관련 행사 개최
- 07.28~08.02 외무상 박의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
- 07.29 도·시·군 지방대의원 선거 실시
- 08.04~08.14 북한 경제대표단 이란, 시리아 방문
- 08.07~08.08 경제, 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
- 08.07~08.09 한스 달그렌 스웨덴 정부특사 방북
- 08.07~08.18 북한지역 집중호우
- 08.20~08.24 '9월 10일상' 전국태권도종합경기대회 개최(평양)
- 08.24 김정일 선군혁명영도 개시 47돌 중앙보고대회 개최
- 08.26 김정일 지시로 시장 통제 강화
- 08.30~09.03 제21차 평양국제탁구초청경기대회 개최(평양)
- 08.31~09.03 제25차 WHO 동남아시아지역 보건장관회의 및 제60차 지역총

- 회 참석(부탄)
- 09.01~09.04 태국 록슬리 태평양 주식회사 대표단 방북
- 09.01~09.05 중국 장애인연합회 대표단(단장: 왕신현 부주석) 방북
- 09.01~09.06 네팔 국제문화 및 교육재단 대표단 방북
- 09.01~09.18 황해북도 친선대표단(단장: 이상관 인민위원장) 몽골 방문
- 09.03~09.04 박의춘 외무상, 비동맹회의 참석(테헤란)
- 09.03~09.07 북·러 국경철도공동위원회 연례회의(천진)
- 09.04 김계관 외무성 부상 북경 방문
- 사회주의교육테제 발표 30주년기념 중앙보고회 개최
- 제3차 북중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개최(베이징)
- 09.04~09.08 중국 정부문화대표단(단장: 주화평 문화부 부부장) 방북
-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 일행 방북
-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 대표단 방북
- 중화전국가자협회 대표단(단장: 임현량 부주석) 방북
- 09.05 보위부, 스파이협회의 외국정보요원 체포관련 기자회견(인민문화궁전)
- 아랍에미레이트 경제개발장관 겸 국영 에마르부동산 알리 라시드 알라바르회장 방북(당일)
- 09.07 산림·식물·토지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토론회’ 개최(인민문화궁전)
- 09.08 정권 창건 59돌(9.9)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09.08~09.15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대표단(단장: 심위평 부회장) 방북
- 09.11 평양미술대학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개최
- 09.12~09.13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개최
- 09.13~09.18 미얀마 외무성 대표단(단장: 우쵸투 부상) 방북
- 09.14 북·미얀마 ‘외무성간 협조에 관한 합의서’ 체결
- 09.14~09.15 이탈리아 외무성 대표단(단장: 잔니 베르네티 부상) 방북
- 09.15~09.16 류사오밍 주북 중대사 나진, 선봉 특구 방문
- 09.17 아랍에미레이트연합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09.18 외무성대변인, 북·시리아 협력력 의혹 부인
- 09.18~09.20 태풍12호 위파 피해
- 09.18~09.25 외무성대표단(단장: 김영일부상) 중국방문
- 09.20 백두산선군청년 2호발전소 건설 착수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8기 35차 전원회의 개최(함흥)
- 스와질랜드와 대사급외교관계 수립
- 주나이지리아 북한대사 이찬호 임명
- 09.20~09.22 국가과학원대표단, ‘동북아첨단기술박람회’ 참가(심양)
- 09.20~09.27 시리아 아랍사회부흥당 대표단 방북
- 09.24 도미니카공화국과 대사급외교관계 수립
- 09.24~10.0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총회 참석(제네바)

- 09.25~10.01 김일성고급당학교 대표단(단장: 전기철 부국장) 중국 방문
 09.26 파테말라와 대사급외교관계 수립
 북·러 공동우표발행식(모스크바 국제우편센터)
 화장품 등 장사품목 제한 조치 실시
- 10.03 개천절 행사 개최
- 10.04~10.17 북한 태권도 대표단 미국 순회 공연
- 10.06 조총련, 2007남북정상선언 지지대회 개최(도쿄)
- 10.06~10.11 몽골 정부경제대표단(단장: 야스드바르르 공업 및 무역성 부상) 방북
- 10.08~10.11 제3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최(3대혁명전시관)
- 10.11 김혁 생일 10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10.11~11.10 남·북·일 공동 고구려 무덤 벽화 사진전시회 개최(조선중앙역 사박물관)
- 10.12 만경대혁명학원 및 강반석 혁명학원 창립 60주년 기념보고대회 개최
- 10.14 심양 북·일 비공식회의 개최
- 10.15~10.22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이탈리아, 시리아 방문
- 10.16~10.18 베트남공산당 농득 마잉 서기장 방북
- 10.16 신임 내각부총리에 태종수 임명
- 10.17 국제김일성기금 창설
- 10.19 북·러시아, 2007-2008년 외무성간 교류계획서 조인
- 10.19~10.22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 시리아 방문
- 10.23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10.23~10.24 북·EU, 제3차 경제개혁워크숍 개최(평양)
 국가과학원 창립 55돌 기념 전국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10.23~10.31 제18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개최
- 10.24 제54차 농근맹 전원회의 개최
- 10.25 제50차 여맹 전원회의 개최
 미얀마 주재대사에 김석철 임명
- 10.26~10.27 전국 '당세포비서대회' 개최(평양)
- 10.26~10.30 김영일, 베트남 지도부와 협력 확대 협의
- 10.27~11.01 나미비아 정부대표단(단장: 찰스디엔피 나몰로흐) 방북
- 10.30 미군함, 소말리아해상에서 북한 선박 '대홍단호' 구출
- 11.02 저작권법 시행규정 채택
- 11.12 유네스코 과학기술도서 전시회 개최
- 11.14 사할린주 통상경제협력 실무그룹-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무역,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 및 의정서 조인(평양)
- 11.14~11.15 뉴질랜드 윈스턴 레이몬드 피터스 외무상 일행 방북
 전국 과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11.19~11.20 북미간 금융실무회의 개최(뉴욕)
- 11.20 북한 FAO총회 제34차회의 참석 및 연설

-
- 11.21 ~ 11.30 경제대표단 칠레·쿠바 방문
 - 11.22 외무성대변인 인권결의안 거부 발표
 - 11.25 국제해사기구(IMO)총회 제25차회의 참석 및 연설
 - 11.28 북·중, '2008년 체육교류에 관한 집행계획서' 조인
 - 11.30 북·중, '기상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회담록' 조인
 - 11.30 ~ 12.01 전국 '지식인대회' 개최(평양)
 - 12.03 북·쿠바,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제26차회의 의정서'와 '2008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 조인
 - 12.03 ~ 12.05 미국 힐차관보 방북
 - 12.04 러시아 철도공사대표단 나진-하산 철도 연결구간 설계검사 완료
 - 12.04 ~ 12.07 남북경제협력공동위 1차회의 개최
 - 12.06 외무성대변인, 큰물피해 관련 국제사회 지원에 사의 표시
 - 12.07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제36차 전원회의 개최
 - 12.08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 발표회 개최
 - 12.11 EU트로이카 대표단 방북
 - 12.11 이란, 신체증진위 대표단 방북
 - 12.11 중국, 과학기술대표단 방북
 - 12.13 과학기술협조위 제42차회의, 조중의정서 조인
 - 12.14 북·중 베이징올림픽 성화 '평양봉송'합의
 - 북·이란, '체육분야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
 - 12.17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대표 방북
 - 12.20 김정숙 탄생 90돌 당·군·청 결의대회 개최
 - 12.23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12.24 김정숙 탄생 9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 편집간사: 권혜진 북한연구실 연구원

연구총서

| | | | | |
|---------|---|----------|------|---------|
| 2006-01 |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6-02 |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 임강택 | 저 | 7,000원 |
| 2006-03 |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 최수영 | 저 | 5,000원 |
| 2006-04 |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 이 석 | 저 | 8,000원 |
| 2006-05 |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6-06 |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 전현준 | 외 공저 | 10,000원 |
| 2006-07 | 북한 경제개혁의 실패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 김영운 | 저 | 10,000원 |
| 2006-08 |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 손기웅 | 저 | 6,000원 |
| 2006-09 |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 정영태 | 저 | 7,500원 |
| 2006-10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 황병덕 | 저 | 8,500원 |
| 2006-11 |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 서재진 | 저 | 10,000원 |
| 2006-12 |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조 민 | 저 | 6,500원 |
| 2006-13 |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 최춘흙 | 저 | 5,000원 |
| 2006-14 |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 박영호 | 저 | 7,000원 |
| 2006-15 |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 배정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6-16 |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 임순희 | 저 | 8,000원 |
| 2006-17 |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 이금순, 김수암 | 저 | 10,000원 |
| 2006-18 |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 조정아 | 저 | 6,000원 |
| 2006-19 |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 2007-01 |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 최진욱 | 저 | 6,500원 |
| 2007-02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김수암 | 저 | 6,000원 |
| 2007-03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 서재진 | 저 | 8,500원 |
| 2007-04 |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7-05 |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 손기웅 | 저 | 7,000원 |
| 2007-06 |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 이교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7-07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 최수영 | 저 | 6,000원 |
| 2007-08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 허문영 외 | 공저 | 10,000원 |
| 2007-09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 정영태 | 저 | 6,000원 |
| 2007-10 |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허문영 외 | 공저 | 9,000원 |
| 2007-11 |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영태 외 | 공저 | 7,000원 |
| 2007-12 |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 김국신 외 | 공저 | 8,500원 |

| | | | | |
|---------------|--|-----|------|---------|
| 2007-13 |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저 | 6,000원 |
| 2007-14 |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 최춘흠 | 저 | 5,000원 |
| 2007-15(1) |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 김규륜 | 외 공저 | 10,000원 |
| 2007-15(11)-1 |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11)-2 |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11)-3 |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11)-4 |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6 |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 김영운 | 외 공저 | 8,000원 |
| 2007-17 |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 이 석 | 저 | 8,500원 |
| 2007-18 |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 2007-19 |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 이금순 | 저 | 7,000원 |

학술회의총서

| | | | | |
|---------|--|--|--|---------|
| 2006-01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 | | 10,000원 |
| 2006-02 |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 | | 9,500원 |
| 2006-03 |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 | | 10,000원 |
| 2006-04 |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 | | 9,500원 |
| 2006-05 |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 | | 7,000원 |
| 2007-01 |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 8,500원 |
| 2007-02 |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 | | 10,000원 |
| 2007-03 |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 | | 9,000원 |

협동연구총서

| | | | | |
|------------|---|-----|------|---------|
| 2006-04-01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6-04-02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1): 안보전략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6-04-03 |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11): 경제전략 | 박종철 | 외 공저 | 10,000원 |
| 2006-11-01 | 한반도 평화 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 황병덕 | 외 공저 | 10,000원 |
| 2006-11-02 | 한반도 평화 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 | 10,000원 |
| 2006-11-03 | 한반도 평화 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 황병덕 | 외 공저 | 10,000원 |
| 2006-11-04 | 한반도 평화 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 황병덕 | 외 공저 | 10,000원 |
| 2006-11-05 | 한반도 평화 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 황병덕 | 외 공저 | 10,000원 |
| 2006-12-01 |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 황병덕 | 외 공저 | 10,000원 |
| 2006-12-02 |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 황병덕 | 외 공저 | 10,000원 |
| 2007-10-01 |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 김국신 | 외 공저 | 6,000원 |

| | | | |
|------------|---|----------|---------|
| 2007-10-02 |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 손기웅 외 공저 | 9,000원 |
| 2007-10-03 |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 최대석 외 공저 | 7,500원 |
| 2007-11-01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공저 | 10,000원 |
| 2007-11-02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 임성학 외 공저 | 9,000원 |
| 2007-11-03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배정호 외 공저 | 6,500원 |
| 2007-11-04 |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함택영 외 공저 | 6,000원 |
| 2007-11-05 |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전성훈 외 공저 | 6,500원 |
| 2007-11-06 |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김규륜 외 공저 | 8,000원 |
| 2007-11-07 |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이교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7-11-08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 양현모 외 공저 | 7,500원 |
| 2007-11-09 |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박광기 외 공저 | 8,500원 |

논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2007) | 10,000원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06 | 임순희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 임순희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7 | 김수암 외 공저 | 1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 김수암 외 공저 |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 | | |
|---------|-------------------------------|------------------------------|
| 2006-01 |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
| 2006-02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전현준, 김영윤 |
| 2006-03 |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김수암, 이금순 |
| 2006-04 |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
| 2006-05 |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 여인곤 |
| 2006-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 서재진, 김영윤 |
| 2006-07 |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 김국신, 배정호 |
| 2006-08 |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 김영윤 |
| 2006-09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6-10 |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 배정호 |
| 2006-11 |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
| 2006-12 |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6-13 |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 김규륜 |
| 2007-01 |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
| 2007-02 |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
| 2007-03 |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김수암, 이금순 |
| 2007-04 |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
| 2007-05 |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 전성훈 |
| 2007-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 최수영 |
| 2007-07 |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 최수영 |
| 2007-08 |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
| 2007-09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 김국신, 여인곤 |
| 2007-10 |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 배정호 |
| 2007-11 |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 정영태 |
| 2007-12 |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 2007-13 |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 여인곤 |

| | | |
|---------|--------------------------------|------------------------------|
| 2007-14 |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
| 2008-01 |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 | | |
|---------|--|--------------------|
| 2006-01 |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 김영윤 |
| 2006-02 |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 박영호 |
| 2006-03 | 북한 개발협력에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 임을출 |
| 2006-04 |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 김규륜 |
| 2006-05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 전현준 |
| 2006-06 |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 서보혁 |
| 2006-07 |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 고재홍 |
| 2006-08 |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 이현근 |
| 2006-09 |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전미영 |
| 2007-01 |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 전성훈 |
| 2007-02 |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 조한범 |
| 2007-03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
| 2007-04 |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 박형중 |
| 2007-05 |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
| 2007-06 |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 임을출 |
| 2007-07 |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 최진욱 |
| 2007-08 |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전성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 | |
|------|-------------------------------|---------------|
| 2006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 |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
| 2006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 |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
| 2007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

월간 북한동향

비매품

| | |
|------|-----------------|
| 2007 |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
| 2007 |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근,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 연례정세보고서 2007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
2007~200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